

“전국의 각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하는 19년 전통의 NGO종합모니터단”

보도자료

2017. 12. 28. (총 73장)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 08786 서울 관악구 썩고개로 87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간사단체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가 국가 5부를 제대로 감사하도록 모니터·평가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보고서

국정감사(20-2) 종합평가회 겸 국정감사 우수상·모범상 시상식

- ◆ 제20대 국회 2차년도, 문재인 정부 첫 국감 성적은 C-학점
- ◆ 박근혜 정부 적폐국감인지? 문재인 정부 신적폐 국감인지?
- ◆ 정권이 바뀌었지만 쟁점만 달라졌을 뿐 국민불안은 여전하다

◆ 일시 : 2017. 12. 28.(목)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하오며, 해마다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15대 국회 말부터 2017년도 정기국회까지 19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하고 엄정 평가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 외 20인)은 “2017년도 국정감사종합평가회 겸 국정감사 우수상·모범상 시상식”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에서 국민(유권자)들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유권자 정보’로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성적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국감평가의 중요성》 한국의 현재 정치상황에서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만큼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와 홍보로 지역주민들의 신임을 얻어 국회 재입성을 하고자 자발적으로 국정감사자료집까지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당연한 방법이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은 ① 민주정치 체험학습기능 ② 1년에 하루라도 생계를 뒤로 하고 국민주권을 실천하는 애국봉사기능, ③ 국민의 알권리 확보기능을 수행하는 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입수해 공정한 의정평가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② 《모니터단의 충실성》 모니터단은 충실한 국정감사 모니터/ 평가를 위해 3개월동안 전력투구하는 바, ① 첫 1개월은 국정감사모니터위원 모집 및 교육활동, ② 2개월째는 국정감사 현장 및 화상·인터넷을 통한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활동, ③ 3개월째는 국감활동 분석(1천건의 보고서 등) 및 평가활동으로 지난한 업무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정부의 예산이나 공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70개 NGO연대라고 일반명칭화 되고 있지만 참여단체는 지부까지 포함해 3천개가 넘으며, 회원단체들의 심시일반 협조와 시민단체 대표, 교수, 변호사, 세무사, (한)의사 등 전문가들과 시민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의 협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③ 《모니터단의 공정성》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여·야당이나 진보·보수에 치우치지 않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국정감사 평가기준은 지난 19년 동안 홈페이지에 365일 공개되어 있고 각 기회마다 고지하고 있으며, 특징은 국감 중 결석 2일 이상은 평가에서 제외하였고, 상임위별로 25% 이내로 선정하므로 위원회가 경쟁이 치열하면 열심히 하고도 우수의원 선정이 안되기도 합니다. 이에 매년 6월의 의정활동 12개부문 종합평가(1개년간)는 상임위별이 아닌 300명 국회의원 전체평가(현정대상)이므로 국감평가에서 잘 하고도 선정되지 못한 분도 평가받게 됩니다.

붙임 : 국정감사(20-2) 종합평가와 우수의원(우수상임위원장) 모범의원 수상자 명단 1부. 끝.

《상세한 분석·평가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 WWW.GOOD.AW.ORG 참조바랍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02-523-8760~7》

2017년도 국정감사(20-2) 우수상임위, 모범·우수의원 명단

(전국의 270개 NGO가 연대한 19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 국정감사 모범의원 (국회직, 다선 순)

박주선 국회부의장 (외교통일위, 국민의당)	이주영 외교통일위원 (개헌특위위원장, 한국당)
백재현 행정안전위원(예결특위위원장, 민주당)	

■ 우수 상임위원회(장)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이진복 정무위원장 (한)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민)	

■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 원 회	우수의원/현원 (선정비율, %)	국정감사 우수의원 《준칭 생략, 가나순》 ()안 국감당시 당적 민(더불어민주당) 한(자유한국당) 국(국민의당) 바(바른정당) 정의당(정)
국 회 운 영	5/28 (17.9)	권 은 희 (국) 김 선 동 (한) 노 회 찬 (정) 박 홍 근 (민) 정 태 욱 (한)
법 제 사 법	4/17 (23.5)	금 태 섭 (민) 박 지 원 (국) 윤 상 직 (한) 정 성 호 (민)
정 무	6/24 (25.0)	김 성 원 (한) 김 종 석 (한) 김 해 영 (민) 박 선 숙 (국) 정 재 호 (민) 채 이 배 (국)
기 획 재 정	6/26 (23.1)	김 성 식 (국) 박 영 선 (민) 윤 호 중 (민) 이 현 재 (한) 이 혜 훈 (바) 추 경 호 (한)
과 학 기 술 방 송 통 보 신	6/24 (25.0)	김 경 진 (국) 김 정 재 (한) 박 대 출 (한) 변 재 일 (민) 송 희 경 (한) 유 승 희 (민)
교 육 문 화 체 육 관 광	7/29 (24.1)	곽 상 도 (한) 손 혜 원 (민) 유 은 혜 (민) 이 동 섭 (국) 이 철 규 (한) 전 희 경 (한) 조 승 래 (민)
외 교 통 일	4/22 (18.2)	박 병 석 (민) 유 기 준 (한) 이 태 규 (국) 정 양 석 (바)
국 방	4/17 (23.5)	김 중 로 (국) 김 학 용 (한) 이 종 명 (한) 이 철 희 (민)
행 정 안 전	5/21 (23.8)	박 남 춘 (민) 이 명 수 (한) 이 재 정 (민) 장 제 원 (한) 표 창 원 (민)
농 립 축 산 해 양 수 산	5/19 (26.3)	김 현 권 (민) 위 성 곤 (민) 이 만 희 (한) 정 인 화 (국) 황 주 흥 (국)
산 업 원 처 자 원 통 중 기	8/30 (26.7)	김 도 읍 (한) 손 금 주 (국) 송 기 현 (민) 어 기 구 (민) 유 동 수 (민) 이 훈 (민) 정 유 섭 (한) 최 연 혜 (한)
보 건 복 지	5/22 (22.7)	기 동 민 (민) 김 승 희 (한) 남 인 순 (민) 성 일 종 (한) 정 춘 숙 (민)
환 경 노 동	4/16 (25.0)	강 병 원 (민) 신 보 라 (한) 임 이 자 (한) 한 정 애 (민)
국 토 교 통	7/31 (22.6)	박 완 수 (한) 윤 관 석 (민) 이 원 욱 (민) 이 현 승 (한) 전 현 희 (민) 주 승 용 (국) 함 진 규 (한)
여 성 가 족	3/17 (17.6)	박 주 민 (민) 신 용 현 (국) 이 양 수 (한)
비 고	79/343 (23.0)	정당별 분석 : 더불어민주당 국무의원 5명 제외 116명 중 32명(27.6%), 자유한국당 107명 중 30명(28%), 국민의당 40명 중 14명(35.0%), 바른정당 20명 중 2명(10%), 정의당 6명중 1명(16.7%) <국감당시 기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17년도 국정감사(20-2) 우수국회의원 통계

① 정당별

구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비교섭단체
선정의원(명)	32	30	14	2	1
전체의원(명)	116	107	40	20	10
선정비율(%)	27.59%	28.04%	35.00%	10.00%	10.00%
검임상임위포함(명)	134	123	46	23	12
선정비율(%)	23.88%	24.39%	30.43%	8.70%	8.33%

※ 국회의장 제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국무위원 5명을 제외한 치임 《운영, 여성가족위원회 포함 의원수》

② 당선횟수별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선정의원(명)	46	20	7	5	1	0	0	0
전체의원(명)	133	68	48	34	9	4	1	1
선정비율(%)	34.59%	29.41%	14.58%	14.71%	11.11%	0.00%	0.00%	0.00%

※ 정의화 국회의장(5선) 불포함

③ 여성의원

구분	여성의원(명)	우수의원(명)	선정비율(%)
의원수(명)	50	20	40.0%

※ 감사위원 298명 중 여성감사위원의 비율은 16.77%임

④ 지역구 / 비례대표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계
선정의원(명)	18	61	79
전체의원(명)	47	251	298
선정비율(%)	38.30%	24.30%	26.51%

※ 지역구 의원 252명 중 국회의장님 제외

⑤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별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7	16	34.04%	강원도	8	3	37.50%
부산광역시	18	6	33.33%	충청북도	8	1	12.50%
대구광역시	12	3	25.00%	충청남도	11	3	27.27%
인천광역시	13	4	30.77%	전라북도	10	0	0.00%
광주광역시	8	2	25.00%	전라남도	10	5	50.00%
대전광역시	7	2	28.57%	경상북도	13	2	15.38%
울산광역시	6	0	0.00%	경상남도	16	3	18.75%
세종시	1	0	0.00%	제주도	3	1	33.33%
경기도	60	10	16.67%	계	251	61	24.30%

※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국회의장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 1명 제외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모니터·평가활동 개관

- (1) 《**모니터단의 활동근거**》 국정감사NGO모니터단(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등 21명의 단장)은 헌법(제1·21조)상의 국민주권과 알권리, 국회법(제7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2조) 등의 의사공개원칙에 따라, 지난 19년 동안 1천명의 모니터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국회의 공식지원 제안도 사양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니터링을 하여 ‘국회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제도를 정착시켰다. 《2017년도에 감사반장인 상임위원장이 최소한 48개 국정감사장 현장에서 직접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위원들의 참관사실을 말하며, 수감질서를 바로 잡았으며, 2017년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설훈 위원장은 국감말미 인사말을 통해 “국정감사 시작부터 종료할 때까지 시종일관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감사드린다고 하였음.》
- (2) 《**모니터단의 그간업적**》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다른 시민단체들이 네가티브운 동으로 국회를 폄훼할 때 ① 포지티브 운동으로 국회 4대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② 국회의 국정과 재정 통제기능으로 국가5부를 건전케 유도하고, ③ 민주국가의 상징인 국회를 시민·대학생들이 감시함으로써 주권자로서 민주정치를 이해하고 학습 하게 하였으며, ④ 국감제도 관행 개선노력을 하였고, ⑤ 국정감사 기간 중 후원회 개최 근절, ⑥ 국정감사 내용의 실시간 인터넷 중개방송으로 국민 알권리 제고, ⑦ 국정감사의 과잉영접 등 수감질서 개선, ⑧ 국감의 제도, 내용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회감시 우수모델로 외국학자들에게까지 학문적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 (3) 《**모니터단의 조직구성**》 모니터단은 전국규모의 지부를 가진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여 실제로 3,000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통칭으로 270개 NGO연대기구라고 하고 있다. 모니터 장소가 협소하여 현장 모니터 배치에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 모니터링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실제 1천명 이상의 모니터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모니터 인원 및 배치와 공문발송은 창구를 일원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간사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총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국정감사를 한 번이라도 직접 경험해보았다면 그 같은 오해가 얼마나 얼토당토않은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국정감사가 15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전국적인 규모로 치러지기 때문에 어떤 한 단체가 나서서 홀로 모니터링을 주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국가기관조차 그러한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적인 지부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게 간사단체를 위임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가 없어서 수년째 계속 간사단체로서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국감모니터단의 간사단체라고 해서 국

가예산지원이나 권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욱 더 어려운 형편이다.

- (4) **《모니터단의 평가기준》** 국정감사 평가기준 중 2일 이상(오전 오후로 나누어 4회이상) 결석한 의원은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준은 지난 19년 동안 모니터단의 각종 발간자료와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니터 위원 교육을 통하여 안내·공개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회 보좌진 국회출입기자 전문가 등과 수십차례 회의를 거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으며, 그 평가기준에 따라 여야, 친소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자신이 모신 의원이 우수의원에 선정되지 못하면 모니터단을 방문하여 평가자료를 확인하고는 오히려 모니터단을 모함하거나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들이 막겠다고 하며 모니터단의 선정을 인정하게 되었음》
- (5) **《선정 우수의원의 수》** 전체 감사위원 중 상임위별로 25% 범위 내에서 우수의원을 선정·시상하는 것은 고민 끝에 결정된 합리적인 수치이다. 그리고 지난 19년 동안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 처음엔 적은 수를 선발하여 우수의원을 시상하자는 의견도 있었다(소수를 선발하는 일이 훨씬 용이함). 그러나 전체의원 중 소수만을 선정하여 시상할 경우에는 나머지 의원들이 상을 미리 포기하고 의정활동을 등한시하게 될 것이고, 상임위별 상대평가를 통하여 감사위원들간 경쟁을 높여 결과적으로 좀 더 나은 국정감사활동, 의정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선을 연구하여 25%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 (6) **《썩통상과 국회타락》** 모니터단은 한 해 의정활동 중 15관왕이니 7관왕이니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앓다고 본다. 그 동안 국정감사모니터단의 포지티브 운동의 성공에 힘입어 썩통상이 범람하였다. 썩통상의 내용을 보면 공개도 되지 않은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국감우수의원이 되거나, 국정감사활동 12일 중 7일을 결석한 의원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썩통상의 선정기준은 많은 경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평가기준과 보도자료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 쓰기도 하였으며(많은 분들과 활동을 공유하고자 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 원칙상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음), 실제 시상식에 가보면 국정감사에 대한 아무런 평가내용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원들에게 상을 주기에 급급하여 몇 시간씩 상 받으러 올 의원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또한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의정활동을 보고할 때에 수상사실을 지역구민에게 자랑(?) 하여야 한다는 강박에 이러한 엉터리 썩통상을 용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민민복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썩통상은 유권자를 기망하는 것이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스스로 폄하하고, 건전한 시민운동을 망치는 것으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2017년도 국감 총평 및 우수상임위, 모범·우수의원 선정

— 전국 270여개 NGO가 연대한 19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 국감 평가회 겸 시상식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등 21인의 공동단장)은 270여개 NGO로 구성된 19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당 3~5명씩 연인원 1,000여명(온·오프라인)의 현장모니터위원을 파견하고 온라인으로 모니터를 하여, 국정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상황과 내역을 날날이 모니터링하였고, 298명 감사위원 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모니터하면서, 입수가능한 모든 국감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19년간 공개하고 있는 정밀·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모니터방법과 평가기준은 이하에) 선정된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겸 국정감사 우수상·모범상 시상식”을 2017년 12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2017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적폐와 신적폐 논란에 물힌 C-학점 국정감사

(국가안보, 경제불안 등 민생국감을 외면한 채, 국감 보이콧, 적폐와 신적폐 논란에 몰입한 정쟁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어 우려된다.)

1. 2017년도 국정감사는 C-학점

국회의 헌법상 권한(헌법 제61조)이요, 국회가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의정활동의 백미(白眉)인, 제20대 제2차년도(2017년도) 국정감사는 지난해와 같은 여야의 극단적 충돌로 인한 파행은 없었지만 국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 C-학점 국정감사였다.

2. 장미대선으로 여당의 지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 몰두, 방송의 공정성을 내세운 제1야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인한 반쪽국감

이번 국정감사는 북한 핵·미사일 실험 속에 전개된 20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이다. 이러한 안보불안은 더불어 일자리 불안, 경제침체 속의 불안, 살충제 계란, 생리대 등 여성용품 불안 등 온갖 먹거리, 민생불안 속에서 전개된 국정감사가 이러한 불안을 씻어주고, 장미대선으로 출범한 새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들이 국정을 제대로 점검하며, 부정부패 요인을 척결하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MBC 구하기’를 이유로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장겸 전 MBC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방송장악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음모”라며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보이콧을 선포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해 결국 국정감사의 기초가 되는 2016년도 결산안 처리도 지연되었다.

10월 12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이 원인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날치기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창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야당의 보이콧은 사실상 정기국회의 맥을 상실케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정상화되었지만 처처에 파행의 여진을 남겼다.

결국 파행부분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문위와 과방위가 추가 국정감사까지 실시하였지만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4. ‘이번 국정감사는 적폐 국감이다’ 의 실상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적폐’ 라는 용어가 나온 감사장이 5곳(정무 2곳, 산업통상자원 1곳, 농림 2곳)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이번 국감은 적폐국감이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상임위원회는 물론 13개 본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적폐’ 논란이 전개되었다.

실제로 2017년 11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올라온 회의록 72개 중 ‘적폐’ 용어가 들어 있는 회의록이 68개였다. 파행으로 미실시된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13),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 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10.26),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10.17),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경찰청 국정감사(10. 17) 등 4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만 ‘적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운영위원회의 11월 6일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를 살펴 본 바, 적폐관련 질의를 한 의원은 28명 중 15명(김경수, 김경진, 김동철, 김선동, 김정재, 민경욱, 박용진, 송석준, 송옥주, 엄용수, 위성곤, 전희경, 정우책, 정태욱, 조승래 의원)이였으며, 이날 질의를 하지 않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 참석하지 않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57.6%의 의원이 질의 중에 ‘적폐’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물론 피감기관의 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대답 중에 ‘적폐’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5. 박근혜 정부 국감이었나 vs 문재인 정부 국감이었나?

이번 국정감사 박근혜 정부 국감이었는지 문재인 정부 국감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7년 12월 16일 현재 국정감사 회의록(110개) 분석을 해 본 결과, 박근혜(존칭생략) 검색 국정감사 회의록은 94개 였고, 문재인(존칭생략) 검색 국정감사 회의록은 104개로 ‘문재인’ 을 언급한 회의록이 약간 더 많았다.

상임위원회별 10월 30일과 31일 종합 국정감사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의원의 질의이나 피감기관의 답변 중 ‘문재인’ 정부(존칭생략)가 나온 경우에는 456회 였으며, 박근혜 정부(존칭생략)가 ‘나온 경우는 216회였다. 이를 보면 문재인 정부 국감이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된다. 다만,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도 112회, 노무현 정부 69회, 김대중 정부 17회가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현 정부와 과거정부

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나온 경우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인데, ‘문재인’ (존칭생략)은 89회, ‘박근혜’ (존칭생략) 36회 이었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케어 논쟁이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로 ‘문재인’ (존칭생략)은 53회, ‘박근혜’ 는 18회였다.

6. 정책현안 질의보다는 PC 팻말 슬로건으로 파행, 국감 희화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 멤버십 포인트소멸과 관련 통신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의 적정성, 전술핵 재배치 여부, 핵잠수함 추진여부,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여부, 흥진호 사태에 대한 진실, 인터넷 전문은행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권 ·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사시 비상대피시설 문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책변화, 한미FTA 재협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 포털뉴스의 공정성 확보문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난맥상, 부산항에서 발견된 ‘살인개미’ (붉은 불개미) 대책, 생리대 등의 안전성, 아동수당 문제, 최저임금제 논란, 비정규직 전환정책의 난맥상, 물관리 일원화, 후분양제 등 정부주택정책의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하며, 평창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는 성과가 있었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관련 파행, 국정교과서 관련 파행, 제1야당 의원들의 국감장 PC 슬로건과 관련한 여야간의 대립, ‘다스는 누구겁니까?’ 라는 말로 대표되는 적폐논란, 사이버뱀글, 블랙리스트 파문 등에 집중되고, 국감장에서 벌어진 의원과 피감기관장(강원랜드 사장)간의 상호 모욕 논란 등 국감의 맥을 흐트러지게 한 단편적인 사항이 부각되어 아쉬움을 크게 하였다.

7. 종인 등의 불출석, 자료제출 거부 지연 등 방해도 많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채택에 있어서의 파행은 크게 줄어 든 반면, 여전히 국감 증인의 불출석 등 국정감사의 권위문제, 감사위원회에 대한 협박문제까지 벌어졌다.

감사위원들이 피감기관의 장에 대해 호통, 막말을 하는 것이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부실 및 지연과 거부 등이 논란이 되었다.

지난해에는 피감기관의 불출석으로 우병우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이 비서실 업무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하였는데, 올해 새정부에서는 조국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이 불출석해 국회운영위원회의 첫날 국정감사가 파행될 뻔 하였다.

8.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1)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 원칙 못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라고 하고 있는 바, ‘정기 집회일 이전에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번도 지키지 않고,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칙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면 국회부터 원칙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지키지 못할 조항이면 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해외현지에서 실시하여 국민의 신속한 알권리 보장이 어렵고, 국정감사의 효과도 반감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필수불가결한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기타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화상 국정감사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제20대 2차년도 국회에서는 일정이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해외국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시간 비행 등 비효율적이고, 국정감사 내용은 국감당시 알 수 없으므로 3차년도에는 반드시 개선해서 국정감사 공개원칙에 따라 재외공관 국감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가 필요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을 선별해 방문하거나 화상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거부, 부실, 지연이 여전한 것은 문제이다.

매년 국감을 할 때마다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증인 불출석, 자료제출 거부, 또 마지못해 제출한 자료도 부실하고, 그래서 부실한 내용을 보완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또 그것도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자료는 많아지고, 그게 지금 국감이 아니라 자료제출을 통해 가지고 피감기관에 대한 업무 가중을 시키는 게 아니냐는 국감 회의론과 무용론까지 빠져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감에서 장관들, 증인들 답변이 동문서답식 아니면 시간 때우기식 얼버무리고 시간만 넘기면 된다 이런 자세는 정말로 대한민국 국정감사에서 고쳐야 할 적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 2017. 10. 30.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에서이기는 하지만, 정용기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피감기관과 관련된 인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공개되었는 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매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나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전까지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4)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 핥기’ 식 국감 종식

역대 최고 수준인 701개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정감사의 위세를 보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과도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수박 겉 핥기식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제20대 국회 3차년도에서는 피감기관 선정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저인망식 피감기관 선정정보다는 문제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과 선택의 관점에서 피감기관을 선정해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5)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 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 10년 전 이명박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멜라민 김치, 문재인 정부에선 생리대 파문
- 핫 이슈인 채용비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크게 지적되고 시정요구되었으나 그대로
- 엄중한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자료』 『거짓답변』 까지 하는 기관장은 반드시 형사고발

(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붕어빵 국정감사의 적폐 청산 제도개선해야

- 1)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까지 피감기관이 시정하지 않아 매년 같은 질의와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것이며, 1987년 민주항쟁으로 부활하여 1988년부터 다시 시작된 국정감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적폐이다.
- 2) 실제로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내내, 제19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붕어빵 국정감사”라는 신조어가 생겼으나, 제20대 국회에서도 중복질의가 심각하였으며, 피감기관들은 국정감사 때만 넘기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국회가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 시정조치요구한 사항조차도 제대로 시정

조치 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허위 답변을 하는 피감기관들이 늘고 있었다.

참고로, 18대 국회 이후 6년간(2008~2013년) 국감 시정조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정조치건수 5767건 중 630건(11%)이 봉어뺑 시정조치로 나타났다. 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통일위원회(128건), 정무위원회(109건) 순이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5차례 이상 반복된 시정조치 요구만 살펴봐도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 △헌혈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비롯해 11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산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대한적십자사 등이 대상이었다.

[외통위]에서는 △외교부에 대한 재외 탈북자 인권보호 및 지원대책 요구 △통일부에 대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주문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중국 내 탈북자 현황 확인 및 적극적인 인권보호 대처 주문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민간단체 지원금 부적절한 집행 재발방지 대책 요구 등을 비롯한 7건이 5차례 이상 반복됐다.

[정무위]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사·조직개편·퇴직 등에 따른 연구과제 중단 대책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전문화 요구 등이 5차례 이상 반복됐다

(나) 봉어뺑 국감근절의 시작은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고발조치

1) 이번 국정감사의 핫이슈 중의 하나인 ‘채용비리’ 역시 지난해(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조치된 요구사항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16년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주요감사 내용 중의 하나로 “산하기관의 채용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고 되어 있다(결과보고서 9페이지). 또한 “산하기관의 채용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라는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3번째 요구사항이다.(동 보고서, 112페이지)

그럼에도 올해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에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증인을 부르는 등을 비롯해 정무위 등 여러 위원회에서 채용비리문제가 속속 불거져

나왔다. 제대로 시정조치되었는가를 확실히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내년 국정감사에서 또 나올 것이 분명하다.

2) 정권이 바뀌었지만 품목만 달라졌을 뿐 국민 불안은 여전

올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생리대 안전성 문제가 크게 조명되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참여정부에서 정권이 교체되어 이명박 정부의 첫 국정감사(2008년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 국감에서는 멜라민 식품(김치)에 대한 관계 당국의 늑장 대처에 대해 장관이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당시 첫날 국감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두 가지(사안에 대해 초기 회수 검사와 판매 유통 금지) 늑장 대처했다”는 것을 시인했고, 전 장관은 “9월 11일 언론 보도가 났을 때 바로 수거 검사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식약청이 중국에서 확인보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7일 수거 검사에 들어간 것은 늑장 대처”라고 말했다. 또 “품목이 많고 검사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판매중지에 들어가는 게 옳은 조치였음에도 늦어졌던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초기 회수 검사와 판매 유통 금지가 늦었음을 시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가 정권이 바뀐 현 국정감사에서도 품목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지적되고 있으며,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불안감만 더하고 있다.

(다) 국회가 수년째 ‘시정조치하라’고 했음에도 재판부는 오히려 ‘가짜증거로 유죄선고’하고,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잘못없다’고 공개적으로 감싸고 나서

- 1) 지난해(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중에 판사가 가짜 증거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 감사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적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2017.1.20.)를 거쳐 시정조치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대법원

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요구한 “감사 조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 는 요구에 대한 회신이 아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고 동문서답하면서 국회를 우롱하였다.

국회의 국정감사로 지적을 받은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은 사법감시 시민사회단체의 질타와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퇴나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진을 하여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국정감사와 국회를 무시하며, 무력화시켰다.

국회 본회의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대법원의 답변내용(6개월 지난 뒤에 등재함)
『장기간 심리가 지연된 후 재개된 ‘SAT 문제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과 관련하여 <u>가짜 원본을 근거로 선고가 내려지는 등 의혹이 있으므로</u> 대법원은 <u>재판사무감사 등 합당한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u> 』 (2017. 1. 20. 국회 시정처리요구)	『향후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관한 의혹 제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법원,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2017.2.,71면) ※ 재판사무감사 실시여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이 전무하며, “그저 잘하겠습니다” 고 비아냥

2) 엉터리 답변서로 국감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얼버무리더니, 막상 2017년도 국감 첫날인 2017년 10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공개석상에서 여야당 중진위원이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질의하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해에는 “일부 시정 개선을 하겠다” 고 하다가, 올해에는 적반하장으로 “SAT재판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 는 듯이 100% 팩트와 다른 거짓 답변을 하여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며, 하급법원의 불법을 감사, 조사하기는커녕 비호했다.

◀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은 오히려 하급법원을 비호하고 나섰다 ▶

정성호 위원 :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지난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SAT 저작권법 위반 사건들, 이걸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짜 서류를 근거로 해 갖고 재판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사실은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위원 : 법원행정처장	빨리 이것 좀 조사해 보고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김소영 :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한 것은 <u>가짜 서류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사법 공조에 의해서 미국 법무성에서 우리에게 보낸 그 문서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u> 그래서 당사자가 24명인데 22명은 이미 형이 유죄로 다 확정되었고 지금 한분만 아직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서 <u>확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u> 《조작된 증거로 억지 자백 유도해 사건 종료함》 정성호 위원 : 어쨌든 이 것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예, 알겠습니다. 《2017. 10.12.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① 엄중한 재판에서 <u>형사사법공조를 했는데 ETS에서 FBI가 조사하여 미국 법무부가 특급항공으로 한국 법무부로 보낸 SAT관련 회신문과, 별도로 검찰이 김앤장 변호사를 통해 ETS 직원과 협잡하여 졸속으로 조작한 짝퉁 회신문이 있다는 점</u> ② 해당 재판부는 <u>진짜 회신문을 감춰두고, 가짜 회신(서류)을 근거로 재판을 하였다는 점</u> ③ 형사사법공조로 2년씩 재판이 지연되고, 매년 국감장에서 <u>법원장까지 ‘다툼이 있는 사건’</u> 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자백을 유도해서 증거조사 없이 <u>유신시절 도입된 간이공판절차로 종결한 점.</u> ④ 저작권 재판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검증이 핵심인데도 이 사건은 <u>원본확인없이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점</u> ⑤ 법정이 아닌 <u>검찰에 가서 문서열람을 하게 한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까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고 한 점</u> 미국 등 전세계 어느 나라도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전혀 없는 SAT 기출문제 저작권 수사와 기소라는 검찰의 잘못을 비호하기 위해 공소제기되었던 2013년에 공소기각이나 무죄선고를 했어야 할 사안을 법원이 꼼수로 재판을 하여 피고인들을 유죄선고하고 전과자로 만들었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듯이 하는 것은 피고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인권을 짓밟는 것임. 《진짜 강간범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하면 무죄를 선고한 미국의 미란다 사례와는 정반대임》

3) 박지원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정조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질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2017. 10. 2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및 산하지법 국정감사에서 **3년간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은 “제가 이 문제를 대법원 등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할 때마다 법원에서는 ‘알았다’, ‘시정하겠다’ 는 답변만 해 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며 “이번만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잘못이 밝혀지고 지적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며 “벌써

몇 년째 검토 중이나” 고 지적했다.

(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지적, 고발조치보다는 시정조치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실효성있는 국정감사의 핵심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내용
2017년 10월 19일	기획재정위	기획재정부	피감기관 과장이 국회의원실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포라이’라고 함.
2008년 10월 9일	지식경제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피감기관 임원의 난동으로 국감 중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국회의원실에 대한 욕설 파문 등 피감기관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심각한 안보위기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장에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허위 답변을 하는 것이야 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질의한 의원이 그 내용이 시정되었는지를 직접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실명제”를 도입하고, 복합적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시정조치팀” 가동, 국회내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시정조치 사항이행을 “실효적으로 평가하는 조직 구성” 등 국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국감 지적사항을 묵살해온 30년 국정감사의 적폐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요구사항》

- ① 국회의 요구는 국민의 요구이므로 제대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피감기관은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한 조치를 하여 국회와 국정감사의 권위와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 ② 사실확인도 없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등을 명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피의자)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적 보호의 철저화를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원칙에 반하는 거짓답변을 한 법원행정처장은 ‘가짜증거재판’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협잡재판을 한 재판부를 엄중감사하여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1. 국정감사 모범의원

(1) 선정근거와 연혁

지난 제15대 국회 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당직 등을 병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기능, 재정통제기능 등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대부분 불참(不參)하거나 매우 소홀하였으나,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구체적인 의정감시와 강직 엄정한 의정평가의 신인도가 높아져 영향력(총선 후보의 공천기준 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관행이 점차 감소하였다. 제17대 국회이후로는 국감을 등한시 하는 관행이 불식되도록, 매년 국회직, 주요당직, 다선의원 등을 대상으로, 모범의원상을 신설하고, 매년 선정·시상한 바, 교섭단체 정당 당직자의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져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놀라운 효과가 발휘되었다.

제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교섭단체 당직자, 다선의원들의 국감참여도가 여타 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서, 특히 국감NGO모니터단에서는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국감우수의원과 다름없는 예우로서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제20대 국회 1차년도에는 국감 보이콧 등 F학점 국정감사로 선정을 하지 않았다.

(2) 선정결과와 선정사유를 약술함 (국회직, 가나다 순)

(가) 박주선 국회부의장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국민의당)은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행정경험과 의정경

협을 바탕으로 국회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번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북핵문제와 미사일지침 개정, 재외공관장 교체 등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해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외교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미사일지침과 관련하여 800km, 중량 500kg으로 된 미사일을 무제한 확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점검하였고, 실무협상이 개시되었는지 여부와 마무리 시점은 언제인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핵탄두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 버린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 너무 과장·과잉된 홍보가 아닌지 점검했다.

문재인 정부 4강 외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외교는 외화내빈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는 설상가상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는 기대무산 그리고 러시아와의 외교는 유명무실이라고 진단하면서 사례들어 조목조목 중량감있게 평가했다.

종합감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하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운명과 관련된 비핵화를 위해서 분명히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조율되어 일치된 견해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주문했고, 구체적으로 공동성명 형식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내용의 발표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강조했다.

2016년 11월에 외교부에서 대북 제재에 따른 대북한 사회경제영향 연구용역을 의뢰한 일이 있다면서, 대북제재 조치가 북한 사회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보고내용이라면서 이에 대해 점검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대사들이 북한을 상대로 한 유엔 제재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제는 이 제재 효과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주도하고 미국이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쳐다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독자적·주도적 제재조치도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며 제안했다.

대내외적인 조치 1호로 공관장 전원에게 대한 사직서를 받은 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궁했다. 외국 교과서 내에 한국과 관련된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질

의하면서 현재 교과서 내용의 왜곡실상을 공개했다.

통일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상 통일부가 남북관계가 교착·긴장 관계에 있고 군사적 행동이 임박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부 업무가 지금 대북업무는 할 게 없지 않느냐 질의하면서 통일부를 효율적이고 국민의 기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이 중단(폐지)된 지가 1년 8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개성공단 피해와 관련해서 기업인들이 국가적인 배려와 관심 속에서 성공한 기업이 일구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투자한 것인데, 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5050억원이 다 지원되었는지 파악하고, 지원이 확정된 금액마저도 왜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따지고 실제 피해액과 인정피해액이 20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업의 피해 주장을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였다.

종합감사에서는 제재 측면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게 주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포기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곳, 즉 북한 주민이 그래도 비교적 용이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에 면회소를 건립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북 문제는 우리가 운전자가 되어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코리아 패싱은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라도 나서서 적어도 관대관, 당국대 당국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1.5 대화라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또 실현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북한의 특사 파견과 관련하여 정책질의를 하였다.

(나) 백재현 행정안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시 갑)은 1차년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2차년도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중임을 수행하고, 제20대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는바,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 특성상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국정감사가 많았음에도 한번도 빠짐 없이 참석하여 책임감 있게 성실하고도 치밀한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이다.

행정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현정부의 공무원 증원정책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많이 하였으며, 특히 현장 공무원의 증원과 사회복지 수요에 맞는 인원의 증원에 대해 집권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무게있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제 개선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 행정수요가 지방조세를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응의성 원칙이란 게 있는데, 혜택을 받는 만큼 자기가 부담하게 하는 응의성 원칙에서 봤을 때에도 비례세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세금을 내는 양이 많아서 응능부담이 아니라 응의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경찰분야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사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시국 사건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맞추고, 국민을 바라보는 수사를 강조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전 대비대책을 점검하였고,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IS조직과 관련된 유럽쪽 테러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 문제를 철저히 점검했다.

소방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추경 때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국가 정부안이 2000명의 소방공무원을 요청해 왔는데 결국은 공무원 증원이라는 프레임에 걸려서 1500명 정도로 여야가 합의를 봤다면 소방력 증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설명과 조치를 촉구하였다.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지역대, ‘119’ 라는 말이 혼동을 가져오

고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며, 소방대원이 해야 될 일을 구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분야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사와 업무 경감대책을 주문하였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리자의 리더십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조치를 당부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배후도시 역할 즉, 교통문제와 심야 시간대 수송연계 대책 등 제대로 할 방안을 강조했고, 앱 택시, 카카오 택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선거관리 및 인사혁신분야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신분 상관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만들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무원 수당의 통합을 주문했다.

내년 6월 달에 치루어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문제, 선거벽보 등의 문제 점검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1987년 이후 국민투표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책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 연금공단의 정부보조금 관련 난맥상을 점검하고 개혁방안을 주문했으며, 정보보호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유아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고, 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해서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여당 중진의원 답게 정부의 100대 추진과제와 관련해서 소관부처가 로드맵을 만들고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하면서 공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으며, 늘리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국민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 현장인력에 대한 강화를 주문하는 등 중량감 있는 정책국감을 추진했다는 평이다.

(3) 이주영 외교통일위원(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5선)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합포, 5선)은 5선의 관록과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

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핵 개발과 대북 제재 등 국가의 안보와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현안문제들을 날카롭게 짚으면서 외교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국감으로 이끌었다는 평가이다.

이주영 의원은 통일분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준비 부족과 대책이 부실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성공단 불법운영 문제, 대북 심리전 전개 필요성, 북한 억류 한국인 보호에 대한 관심 제고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질의를 통해 북한이 자체 발전소로 전력을 생산해 개성공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밝혀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가 나올 때까지 무대책 상태였다고 개성공단 무단 가동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라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고,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주변 수력발전소가 최근 가동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것이 개성공단 전기 공급을 위한 사전 조치로 딱 파악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상 조짐을 파고드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외교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해외 사무소 운영의 문제점 지적, 해외 교민 안전 확보, 대 남미경제외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우수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장

(1) 평가기준 및 방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1) 먼저 **내용적 측면으로** ① 우리 모니터단이 지난 19년 동안 사용 해 온 국민의 의혹사항에 대하여 규명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주요현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사태가 잘 지적되었는

지 여부, ④ 피감기관의 불법·부당한 업무방법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많았는지 여부, ⑤ 잘못된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는지 여부, ⑥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많았는지 여부, ⑦ 국정을 감사함에 있어서 국가적·사회적 이슈를 탁월하게 발굴·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 **절차적 측면**으로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감사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과행을 예방·조기 수습한 점) ③ 의원 전원이 출석하였는지 여부, 국감진행 중 잦은 이석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④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⑤ 약속된 국정감사 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⑥ 불필요한 정회 등이 많았는지 여부(감점) ⑦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하고, 시찰 등이 적었는 지 여부와,

3) **아울러** ① 국감NGO모니터위원회에 대한 방청허가의 신속성과 방청 허가된 모니터 위원수가 적정했는지 여부, ② 시민단체 모니터석 및 모니터명패의 마련여부, ③ 모니터석이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등 모니터 배려사항 등도 고려하였고,

4) 또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의 리더십도 국정감사 성패의 주요 관건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음.

(2) 선정결과 및 사유(抄) (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가)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는 정부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비롯하여 44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전개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합심전력하여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심각한 청년실업률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가계부채 증가대책, 공정거래 문제,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을 죽이는 ‘김영란법’의 난맥상 점

검, 국가보훈정책의 난맥상 점검 등 정책국감을 전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영상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앞으로의 국정감사의 롤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는 평가이다.

박선숙 의원이 “제 기억으로는 아주 특별한 당의 사정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위원장석을 이석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비우신 적이 없고. 저는 짧은 국회 경험입니다마는 이렇게 성실하게 임하는 위원장을 뵈는 적이 없다.” 라고 한 것처럼 위원장의 모범적인 성실성과 위기때마다 조율을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련한 정치력으로 여야당 간사의 협력에 따라 파행의 위기 속에서도 십여분정도 정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무위원회에서는 막말과 정쟁, 증인 헛걸음이 없는 3무(無) 청정국감을 진행하여 여야 할 것 없이 정책질의에 집중했으며, 공정위의 기강해이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순환출자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기업국감 진행의 문제점이 아직도 극복되지 않는 않았지만, 일반인 증인과 참고인이 불필요하게 국감장에 자리하지 않도록 신문 차례를 조정해 질의가 끝난 이들은 조기 귀가하도록 하는 등의 증인신문과정 편의성, 효율성 확보 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0월 31일에는 네이버 이해진 의장, GS건설 임병용 사장, 유한킴벌리 최규복 대표이사장, 피자헛 스티븐리 크리스토퍼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해 뉴스 부당 편집 문제와 포털의 사회적 책임,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에 대한 현안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장병완 위원장,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8개 소관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여야의원들이 합심전력으로 산업, 에너지, 무역, 통상 등 실물경제를 주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문제, 그리고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둘러싼 문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수출

감소와 통상 마찰 문제, 내수침체를 동반한 불황의 지속 및 성장잠재력의 저하, 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에 따른 골목상권 붕괴 및 중소기업의 피해 등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두루 두루 정책국감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석탄화력과 원전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지적과 경제성과 더불어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전력수급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뿐만아니라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되는 등 사면초가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등이 점검되었다.

특허 심사 및 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 대한 원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한미 FTA 재협상 등 핵심 현안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점검하는 국정감사였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 마찰, 한미 FTA 재협상 진행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내수 침체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중국 관광객 급감에 따른 어려움 등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고 참고인들을 통해 이러한 현장 소식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전과 관련 기관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국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업위의 국정감사는 10월 31일 23시 46분까지 위원장과 여야당 간사의 지도력으로 위원장이 고지한 바와 같이 단 한 차례의 파행도 없이 감사를 진행하여 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의원들이 합심전력으로 ‘문재인 케어’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 등 다양한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대한 정책 점검을 하고, 지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도 자아내는 등 상임위원들의 열정적 의지와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로 충실한 정책국감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특히, 국감 직전에 벌어진 생리대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집중조명이 있었고, 새벽 2시 30분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등 국정감사에 대한 열의가 넘쳤으며, 양승조 상임위원장은 매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사실을 고지하고 모니터석 등의 마련을 통해 국정감사의 질서를 회복하고, 여야간의 감정대립으로 인해 파행에 아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련미도 보여 주었다.

복지와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 생활 및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참고인 신문을 통해 보건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과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제도와 재정의 제약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보육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재정 부담의 가능성과 준비금 사용의 적정성, 아동수당의 중복성과 지원 대상의 적절성, 치매 국가책임제의 재정 부담 문제 해결 필요성 등 쟁점이 점검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 R&D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국립한방병원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비합리성과 기관의 청렴도 미흡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사회보장정보원과 관련해서는 부정 수급액의 지속적 증가와 개인 정보 보호 미흡, 신규 금융기관 등과의 정보 연계 부족, 복지사이버안전센터 위탁 관련 규정 개선 등이 지적되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교육 강사의 배제 시

정, 퇴소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아동안전지원단의 교육 확대 등을 주문하였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관련해서는 원장의 기관 복무규정 위반 및 인력 운용 미흡, 음주 광고와 음주문화에 대한 안이한 대응을 우려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불렀던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의 인체 위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이한 대응과 면밀하지 못한 조치를 지적하면서도 식약처가 국민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정립과 신속하고 심도 있는 업무의 추진을 요구하였다. 벌레 수액 문제의 재발 방지, 식품위생법상 이물 혼입 위반에 대한 관리 철저, 식품 안전 업무의 일원화 방안 및 일본산 수산물 안전대책 마련, 불법적 의약품 유통 예방조치 강구 등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문제의 적절성과 수익성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600조에 이르는 기금 적립금 투자의 방향성과 공공투자시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범기업에 대한 연금 투자의 부적절성 등 기금 투자 대상 기관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또한 공단의 전주 이전에 따른 인력 확충 및 관리 방안의 마련과 인사 조치 및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신속한 조직관리도 주문하는 등 정책국감을 하였다.

2.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명단 별첨함)

(1) 개요와 평가의 기본원칙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에 반영하고,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평가하는 기본원칙은 1) 국정감사 기간 및 그 직전직후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2) 국정감사기간 중 2일 이상 결석한 의원과 형식상 출석했으나, 이석이 과다하여 사실상의 질의가 없었던 의원은 평가대상에

서 제외함.

(2) 평가방법

- 01)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 검토(BEST, WORST)
- 02) 국회 영상회의록 등을 통한 관련 정책질의와 질의의 적정성 검토
- 03) 국정감사모니터단의 자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 04) 국정감사요구자료·보도자료의 정책 검토
- 05) 국회공보 및 모니터 보고서의 출결·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검토
- 06) 전문가에 의한 정책 평가 의견 조회
- 07)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국감관련 자료와 자평(自評) 등 분석·확인
- 08)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에의 설문조사 결과 등 의견 참조
- 09) 언론보도내용(단편적 평가라도)의 검토

(자세한 것은 지난 19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방법 참조)

(3) 중점 평가지표

- 10)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 11)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지 여부
- 12)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낭用に 대해 지적을 하였는지 여부
- 13)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14) 사실적인 현장조사(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정책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 15)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 16)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별도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 17)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정책자료, 주요정책·정책개선과제 활

용 여부

- 18) 일문일답식(묻고 그 자리에서 답하기)으로 엄정한 신문(질의)을 했는지 여부
- 1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등 특화된 정책국감 이슈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 20)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가 있었는지 여부
- 21)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의 제정(개정)을 제안했는지 여부
- 22) 건전한 시민운동의 발전과 순기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 23) 국정감사장에 정시에 출석하였는지 여부
- 24) 의원이 과도하게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지 여부 등(감점)

(자세한 지표는 19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지표 참조)

(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원칙

- 25) ① 국감보이콧으로 인한 불출석 외에 국감기간 중 2일 이상 결석한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후에,
 - ② 형식상 출석은 했으나 사실상 질의하지 아니한 의원과,
 - ③ 너무 이석이 잦거나 장시간 이석함으로써 타 의원의 질의내용과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타의원과 똑같은 질의만 하는 의원은 국감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평가는 하되 감점대상이며,
 - ④ 그런 이후에는 질의 내용의 정성평가를 하여 선정함.
- 26) 평가결과와 성실성이 비슷할 때는 다선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 27) 유권자를 우롱하고, 국회를 망치는 ‘짜통상’의 수상소식 보도자료 제공 등 적극 홍보의원은 감점함
- 28) 평가결과와 선수(選數)가 같을 경우에는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협조여부와 평소 의정활동을 참작함.

《법과 제도 미비 지적 예시》

박선숙 의원, 훈령 예규 정비 관련 (2017. 10. 12, 정무위원회)

○ 박선숙 위원 그 점에 관해서 이전 정부와

새 정부가 공히 범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을 하겠습니까.

혹시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지금 국무조정실과 총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령, 예규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73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그중에 법제처의 법제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저는 원래 규정상

다 등록이 되도록 돼 있어서 다 한 줄 알았는데요……

○박선숙 위원제가 이번에 질문드려 보니까 아니었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에, 그렇습니다. 일부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박선숙 위원일부 누락이 아니라 그제…… 누락되는 것의 문제점은 뭐니까?

이게 누락되면 사실은 임의규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박선숙 위원절차적 완결성을 못 갖는 것이지요.

훈령·예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다섯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훈령·예규규정 제2조의 원칙, 필요성·적법성·적절성·조화성·명확성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주제 중의 하나로 들어가 보면

누락돼 있는 것 중에는 테러경보 발령 규정도 있습니다.

또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이런 것 다 누락돼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운영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언급한 것이고요, 15개 정도 누락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행위를 하면 그것의 근거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시정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에, 제가 일단 국무조정실부터 시정을 하고요,

차제에 법제처하고 얘기해서 전 부처의 누락된 것을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관련(2017. 11. 7. 국회운영위원회)

○이훈 위원 1993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파리 원칙’ 이라고 합니다. 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당연히 압니다.

○이훈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인권기구의 제도적 독립성,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구성원의 다원성, 재정상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로는 보장되어 있는데, 조직·인사·예산에서는 일반 행정부처하고 동일하게 정부 통제를 받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이훈 위원 이러한 통제장치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증원 예정으로 예산까지 편성됐던 추가 정원 20명이 폐기됐고, 2009년 4월에는 정원이 축소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사법령상 자율성이 전혀 없어서 전보·채용 등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부지침 규제를 받고 있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근본적으로는 헌법기관화가 되면 자체의 규칙에 의해서 인사를 할 수 있고 예산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데, 현재는 법률상 기구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당장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액 삭감 시에는 정부에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일정 범위 내에서 정원과 조직, 인사 운영상 자율성 보장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조치, 훈령이나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행정조치 등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그래서 헌법으로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인권위법 개정이나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국가인권위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일단은 헌법기관에 준하는 예산 편성, 조직 정원 관리, 인사 운영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 비트코인 관련 (기획재정부, 2017.10.31)

○이혜훈 위원 미국 뉴욕의 연방법원은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국의 인가 없는 어떤 가상화폐 관련 영업도 금지한다 하는 규제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흐름입니다.

가상화폐가 출연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1년에 시가총액으로 하면, 거래금액이지요. 거래금액으로 하면 7배, 양으로 하면 42배 이렇게 막 급성장을 하는데 이런 급성장, 그다음 핀테크 혁명 이런 게 우리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당연히 줄 수 있지요.

○이혜훈 위원 주지요. 이렇게 당연히 주기 때문에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이나 이런 데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구 방치할 게 아니라 적절한 규제, 이게 어느 정도 좋은 목적으로는 활성화도 되고 나쁜 부작용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규제의 틀도 만들고 감독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이혜훈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우리나라는 이것을 손 놓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가상화폐 관련해서 TF가 만들어졌지요. 가상화폐 제도화 TF, 부총리도 거기 멤버시고 한은 총재님도 멤버신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올해 두 번밖에 회의를 안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시다.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1년에 42배씩 성장하는 이 가상화폐 관련한 제대로 된 규제의 틀을 만들려면 1년에 두 번 회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이라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요.

사실 저는 좀 답답한 게 아예 전면금지하는 러시아나 인도네시아처럼 우리도 금지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심지어 중국도 이것을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은행이 나서서 아예 하고 있지요, 인민은행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이혜훈 위원 그다음에 일본은 계속 법 개정을 하면서 가상통화업자를 등록하게 하고 인가를 받게 하고, 사실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감시의 틀, 감독의 틀 안에 넣어 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빗썸, 빗썸이라는 거래소 잘 알고 계시는데 모든 거래소가 다 사설업체입니다. 정부가 어떤 제한도 하지 않습니다. 규제도 없고 조치도 없어요. 심지어 주식시장, 코스닥이 기형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 있잖아요. 상한가, 하한가 변동 폭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하루 등락폭이 40%씩 막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투기판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주무부처가 어디냐 지금 이렇게 여쭙보면 어디라고 답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일단 TF가 금융위 주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 9월에도 제가 답변드리기를 지금처럼 금융위에서,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금융위가 주관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또는 투자 규제 문제나 선의의 피해자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기재부가……

○이혜훈 위원 빗썸 거래소가 하루 거래량이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어요. 하루에 2.6조도 거래가 되는 날이 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시장을, 이것은 통화 안정을 위해서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국민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윤관석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2017. 10.31. 국토교통위)

○윤관석 위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이번에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고통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난민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세입자들의 권리들이 현재 많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세입자로서의 권리 증진과 임대·임차인 간의 평등교섭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라든지 주택임대료 상한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되어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주택 보유자들이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할 때 세입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교섭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하고 연계해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담아내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유념해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 우라늄 라돈 등에 대한 기준(2017. 10.30. 환경노동위)

○강병원 위원 제가 오전 질의에서 우리나라에 우라늄이나 라돈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라늄도 기준이 없었지요. 다이옥신도 우리가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다이옥신 기준이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토양의 다이옥신 기준이 1000pg이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강병원 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주거지일 경우에 그 기준이 50pg입니다.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도 10배 이상 높은 다이옥신이 있는 것이지요.

기준도 없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화해야 될지, 사례나 경험 이런 것도 당연히 없겠지요? 정화 기술에 대한 연구는 있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정화 기술은 지금 국방부에서 이 지역의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혹시 그러면 캠프 마켓의 환경오염 실태를 발표하실 때 앞으로 적정한 조치를 취해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화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정화 방식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나 똑같은 방법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까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주민들께서 가장 믿을 만하다고 선택하시는 방법들을 가지고 정화 방법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강병원 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마 가장 불안해하실 게 바로 이 캠프 마켓 주변에 계신 인천시민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정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기회를 삼아서 다이옥신류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환경부가 앞장서 주시고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강병원 위원 아마 일본 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미국처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군기지에는 구리나 납뿐만이 아니라 다이옥신으로 엄청난 오염들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기준 그리고 정화 방법들도 이 기회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정화 대책,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꼭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신속하게 조치를 다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지적 사례 예시》

신용원 의원, 성인지예산과 관련(2017. 11. 6.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 위원 또 한 가지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합니다.

성인지 예산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우리나라 예산이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어떻게 잘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평가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만들 때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일종의 제안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전적으로 옳고요.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이 사실은 남녀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포함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중로 의원, 계룡대 청와대 대통령 별장관련(2017. 10. 31, 국방위원회)

○김중로 위원 예, 구룡코스 옆에.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알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문제는 그 예산부터 엄청납니다. 76억 들여서 최초 지었는데 지금까지 12년 동안 102억으로 늘어났어요, 총 투자비가. 그런데 병력이 아무도 안 써요, 지금 12년 이후에. 그전에는 영부인께서 많이 쓰셨고 대통령님 오신 것 한 네 번 돼요. 그러면 전투병력이 왜 거기에 26분의 2가 나가 있는 것이며 매년 2억 3000만 원을 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안 써요. 공식적으로 별장이라면 정식 등록을 해서 국가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지 국방비를 왜 그런 쪽으로 전용하고 국방비는 더 달라고 그러고 다니고 이러냐고요.

전투병력이 그리 나가 있으면 총장은 이런 것을 문제시해 가지고 다시 복귀하든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상식선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규에 따라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법적으로 안 맞아요. 장관님께서 이것……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의원, 대학지원사업(2017. 10.31, 교문위)

○이동섭 위원 교육부가 대학지원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사립대 공간만 채워 주고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년간 사립대학 횡령과 감사내역,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사립대의 횡령·유용 사례는 736건이나 됩니다. 무려 3107억 원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립대가 작년에만 예산 부풀리기로 지원받았다가 이월한 금액이 7000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조사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흡한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바로 교육부의 적폐입니다. 적폐 유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학 비리입니다. 사학비리는 눈감아 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짹짹하는 그동안의 사례였습니다. 진보교육감이신 부총리께서 꼭 이걸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황주홍 의원, 민물장어양식수협 유통센터 관련(2017. 10.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황주홍 위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엄청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200억짜리 사업을 적당한 이름의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이 출자를 해서 사업을 따게 되면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사실상 개인화, 개인 소유가 되게 하는 그런…… 사실 이게 편법이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해수부도 그렇지만 농식품부도 보면 비일비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는 일이지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구성 내역을 보면 국비 100억을 가지고 유통센터의 토지도 구입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해양수산부감사관 류재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사업관련(2017. 10. 31.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위원 전에도 제가 5만 3900원 주면서 이게 국가책임제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짚지 못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 전국에 있는 253개 중에서 205개소 정도에다가 개소당 한 7.5억 정도 지방비 더하면 좀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2023억을 투하해서 이런 센터를 짓겠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이재용 과장을 불러서 두 번인가를 토론하면서 미비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아 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많은 곳에 센터를 왜 짓겠다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재원 낭비입니다. 지방에 가면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 문진입니다, 문진.

두 번째, 가족들이 외출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잠깐 모셔 놓겠다 건데요. 지금 문진은 보건소나 병원 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점수만 매기면 이 치매의 정도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에다 모셔다 놓겠다고 그랬는데 돌봄 서비스를 하겠다 그 얘기인데 이분들 점심이나 저녁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세워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25명씩 또 직원들을 채용하겠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맞습니다.

○성일중 위원 25명을 채용하겠다, 전국에 205개소예요. 플러스 다 하면 253개소인데, 이거 엄청난 자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일반 병원 아니면 대학교 같은 데가 있으면 그 공간, 스페이스를 우리가 빌리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잘 훈련되어 있는 조무사나 간호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연구 한번 해 보셨어요?

건강보험공단이 전국에 다 지사가 있으니까 그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한테 오더를 주시면 어느 병원에 스페이스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몇 명이나 여유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치매센터 짓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센터장을 의사들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의사들 훌륭한 분도 많이 있지만 이 센터장은 가슴이 따뜻하고 어른들을 감쌀 수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간호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 하는 분들도 센터장 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도록 문을 여세요. 왜 의사로만 해 가지고 특정 집단한테 주는 인상을 주시냐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

또 이런 센터, 치매국가책임제를 한다고 할 때 지금 의사 선생님 수는 전문 인력이어서 어쩔 수가 없는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시켜 본 적 있으세요? 교육을 이분들에 대해서, 치매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간호사나 조무사에 대해서 교육을 훈련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있으면 그 교육받은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은혜 의원, 청계천 사옥 사무실 공간관련(2017. 10.30)

○유은혜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 관광공사 청계천 사옥 사무실 공간으로 10개 층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중에 8층과 10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합쳐서 한 달에 4500만 원, 현재까지 약 5억 원의 임대료가 이렇게 낭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임시로 일반인들에게 무료 업무 공간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이용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희 의원실 보좌진이 방문했을 때는 10층에 한 두세 명 정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2월이면 11층부터 15층까지 입주해 있는 기존 업체들의 계약도 만료됩니다. 그러면 총 7개 층이 빈 상태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문화관광의 어떤 협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내에 만들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의원, 생활폐기물 가스화 사업관련(2017. 10. 30. 환노위)

○임이자 위원 이게 남원시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부정과 불법, 환피아의 아주 표본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혹시 보고받신 적 있나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실패 사례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임이자 위원 보고받았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임이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잔여 연구비는 지금 환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몇 분 계약 해지되고 이 연구개발에 다시 손대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조치하신 거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임이자 위원 여기 돈이 총 136억 8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다 날리고 이것 고철로 16억에 매각되게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국고 낭비입니까? 국고 낭비뿐만 아니고 나머지는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박완수, 재단 설립관련 (2017. 10.25. 국토교통위)

○ 박완수 위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저도 시정을 이끌어 봤습니다. 재단을 많이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위인설관이고 공식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많은 행정조직이 있고 많은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불필요한 재단을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또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까?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신데요. 실제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 부분은 하나

하나 따지고 보면 다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게 행안부에 전부 다 판단해서 동의해 준 내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특수콘 사업 관련(2017. 10.25. 국토교통위)

○주승용 위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시내 53곳에 236억 원을 들여 가지고 특수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8억이 서울시 예산에서 투입이 됐습니다. 평균 1년에 한 50억씩 사용하고 있는데 특수콘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지하로 잘 빠져 나가서 지하수에 보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문가한테 왜 이러냐고 물어 봤더니 흙으로 막혀 버리고 이물질로 막혀 버리면 6개월만 되면 특수콘으로써의 구실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싼 특수콘으로 교체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왜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꾸냐 이렇게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예, 전부 실패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구 의원, 원격검침사업 관련(2017.10.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여기구 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보니까 3800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조 7000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내실 있게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원격검침사업 재개발공사 5208세대 4억 5800만 원을 포함해서 계약 해지, 배전공사 등으로 총 4만 7000가구에 원격검침기 설치했다가 철거하시면서 총 41억 원 손실을 보셨습니다. 왜 이런 손실을 입으셨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것 답변……

○여기구 위원 아직 답변이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철거 세대 중에서 고객 측 사유로 인한 해지 또 배전계통 변경 등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약 11% 정도가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재개발 해지라든지 계약 해지라든지 배전공사에 대한 원격검침기 문제는 한전이 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전희경 의원, 전국단위 학업성취도조사 관련 (2017. 10. 20. 교문위)

○전희경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못 하게 해서 시험 5일 남겨 놓고 전수조사하던 것이 표본조사 방식으로 바뀌어서 각급 교육청에 시험지까지 전부 배포되어 있다가 표본시험으로 바뀌어 가지고 시험지 찍어 낸 예산 낭비하고 채점예산 낭비하고 이게 줄속이지요. 이재정 교육감님, 그것 건의 하셨지요, 전수조사 표본조사로 해 달라고?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예.

○전희경 위원 폐지하자고 그러셨지요?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사항으로 그 제안을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비전철 디젤 사업 (2017. 10. 20. 국토교통)

○전현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가 철도사업 구간을 지금 경전선과 장항선, 동해선, 이 네 군데를 비전철 디젤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B/C)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디젤을 일단 추진을 했다가 이것을 나중에 다시 전철화를 추가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비효율적으로 두 번의 철도를 건설하게 되어서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전철화를 추진했을 때보다 약 229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셈입니다.

국토부에서 아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이런 편법을 시도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신규 체제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도 친환경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디젤이 아니라 전철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 예산 타당성을 위한 B/C를 맞추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본적인, 근본적인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전철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위원님 계신데요, 비효율적으로 국가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할 때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예 전철화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 임원 고급승용차 제공(2017. 10. 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양수 위원 그리고 배차에 있어서도 지금 4명의 상임이사, 9명의 본부장 그리고 나머지 연구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총 15대의 고급승용차를 전용 배차 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운영지침에서는 공용 배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마사회라든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런 데는 전부 다 전용 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관리·운영지침 다 준수하고 있는데 유독 농어촌공사만 전용 배차 하면서, 솔선수범하셔야 될 분들이 오히려 규정·지침 다 위반해 가면서 편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말씀 말고는 뭐 다른 말씀하실 게 없을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 예, 반성하고 규정대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혜 의원, 에듀파인 설계부풀리기(2017. 10. 17. 교문위)

○유은혜 위원 그래도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되십니다. 1년 반이 넘으셨고요, 작년 감사에서도 또 지적이 됐고요. 그러니까 취임한 기간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KERIS가 가져야 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해 주시고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이어서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에듀파인 관련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에듀파인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보니까 이게 하드웨어 설계를 현실과는 다르게 너무 크게 잡아서, 제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3971억 5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에듀파인 고도화사업 정보화전략계획 결과가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터무니없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다시 재계획을, 2016년도에 다시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는 데만 7억 1600만 원이 추가로 또 소요가 됐습니다.

이 사실관계 알고 계신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설계 부풀리기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일들이 시스템 구축 전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차세대 에듀파인 고도화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그리고 보완 과정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은혜 위원 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 HACCP 관련(2017.10. 17. 보건복지)

○정춘숙 위원 그래서 2013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1066개 HACCP이 도입이 됐고 2016년만 해도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는 이 기업체 중에서, 2013년만 얘기하면 HACCP 인증 지원을 받은 기업체 중에서 13개 업체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이런 처분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또한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지원금을 받고도 1년도 안 돼서 폐업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4개나 있는데 당시에는 반환규정이 없어 가지고 보조금 환수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부랴부랴 반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조금 반환받게 됐지요.

마지막으로는 합리적인 환수 조건 마련해야 되지요, 보조금 사업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은 폐업을 할 때는 채권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폐업을 하더라도 보조금을 환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가 HACCP과 관련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얘기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드린 내용 포함해서 검토한 내용을 종감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개선하는 게 좋은지 합리적인지 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통신단말기 관련(2017. 10. 16. 국방위원회)

○ 이철희 위원 조치하신 것은 잘한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비행기에 탑재할 통신단말기는 중량 재 보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허용하는 중량이 있으니까 이 단말기를 중량을 재 보면 이게 탑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능할 텐데 8개의 초계기 중에 4개는 아예 중량을 초과해서 안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시작할 때 사실은 이것을 체크했으면 시간 낭비 안 했을 일이고.

나중에 이것이 개발업체에 한 116억 원이 나갔는데 원가 정산해서 62억 원 국고 환수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가 62억이네요. 그러면 62억이 낭비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확인했으면 안 해도 될 낭비 62억이 낭비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은 사실은 시행착오로 보기에 너무 간단한 주의부실이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사실 우리 군의 소요와 관련된 것, 체계개발과 관련된 것은 간단한 실수도 사실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듯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거라 조금 더 주의를 꼼꼼하게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정경두 예, 세밀하게 살펴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요. 잘 챙겨 주십시오.

남인순 의원, KMH 문제(2017. 10. 16. 보건복지)

○남인순 위원 너무 편중됐지요. 그러면서 성과를 냈으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의료기관들이 해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지적한 이후에 별로 나아진 점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보건산업진흥원의 직원이 지금 KMH 대표를 맡고 있어요. 점찍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이것을 또 꼼수를 써서 파견으로 바꿨어요.

뿐만 아니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공공기관으로 만들려고 지정 신청을 했는데 2016년, 2017년도 다 기재부에서 지정유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회수도, 돈도 안 되고 있고, 자본잠식 상태이고, 양해각서 체결한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 정상보조금 11억 중에 절반을 인건비로 쓰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재정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아주 수용을 못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표를 그쪽에다 내보낸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는 진흥원하고 KMH하고의……

송기현 의원, 나들가게지원(2017. 10. 16. 산업위)

○ 송기현 위원 그런 일환인데요, 우리가 나들가게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대형 할인마트 또 대기업 슈퍼마켓에 의한 골목 슈퍼, 골목상권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2010년 이후에 보니까 963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골목 슈퍼의 경영을 개선하고 정보화-조직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요.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에 신규 개점 점포 수가 1237개인데 같은 기간 내 폐업 및 취소 점포 수가 2272개, 2017년에도 올해 한 해에만 7월까지 125개 점포가 개점했지만 폐점한 점포도 374개가 됩니다. 여전히 같은 추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부산·대구·광주·대전·충북·충남·제주 이런 경우는 신규 점포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예산도 좀 낭비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효율적으로 골목 슈퍼를 잘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저희가 나들가게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포스시스템들을 깔아 주고 했었는데, 그 뒤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현권 의원, 황금씨앗 사업 관련(2017. 10. 16. 농림위)

○ 김현권 위원 5만ha에 씨를 다 뿌려야 되는데 국내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게 6300ha 것밖에 안 돼요. 씨가 없어서 5만ha에 쌀생산조정제를 할 수가 없어요. 원가 뿌려야 되는데 뿌릴 씨가 없다는 거야, 국내 종자가.

저는 황금씨앗 산업의 출발은 국내 종자의 다양성 확보, 유전자원을 풍부하게 보전해 나가면서 우리 국내 산업을 강화시키는 데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지 않고 당장 내년에 쌀생산조정제 하려고 하는데 뿌릴 씨앗도 없는 이 마당에 지중해 연안에 적합한 중립종 벼를 실험한다, 열대에 가가지고 거기에 맞는 벼를 실험한다? 이런 연구해 봐야 뭐해요, 그거?

국내 산업부터 강화를 시켜 봐야 그리고 그것이 경쟁력이 있고 풍부하게 검증이 되어야 외국에서도 우리 종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믿고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뜬금없이 지중해에 가고 열대에 가고 거기에 가면…… 우리 거기에 가서 제대로 성적이나 낼 수 있겠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설득력이 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돈을 낭비해서야 되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료용 벼는 이미 7품종을 육성했고 앞으로도 계속 종자는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파이로프로세싱 한미간 공동연구 사업(2017. 10.12. 과방위)

○유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혈세 낭비는 이 파이로프로세싱을 한미 간에 공동연구를 한다고 해서 보니까 369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실질적으로 그 주지사가 핵폐기물 연료를……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다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팔 없는 전뽕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무려 369억 원이나 썼고, 거기 체류하는 과학자들이 매년 1인당 3억 원씩이라고 과다한 비용을 썼습니다. 아이다호가 미국에서도 물가가 굉장히 싸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명의 과학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체류를 했고 그 연구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 공동연구는 369억인데 미국하고 50 대 50을 나눕니다. 그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기술을 공유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억 그것은 실제 집행한 것을 보니까 인건비로 한 1억 1000 정도 들었고 체제비하고 이게 한 9000 됩니다. 실제 집행된 것은 한 2억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학용 의원, 불요불급 수리부속 (2017. 10. 12, 국방위)

○김학용 위원 장관님, 국방부 군수관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투 진요 수리부속 확보 현황, 우리 군이 비축하고 있는 양은 51만 2000점, 확보해야 될 목표량의 78.4%에, 부족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56.5%입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확보하지 못하는 전투 진요 수리부속이 많은 반면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창고에서 10년 이상 방치돼 있는 불요불급한 수리부속이 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수량 기준으로 177만 200여 점, 자산 가치 기준으로 2638억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요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부족하고 또 어떤 품목은 10년 이상 창고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국민 혈세 낭비다. 수요 예측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뭔가 새롭게 점검하고 또 부족한 물량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개전 초기 60일 내에 전투장비를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비축해야 되는 그런 품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여간 창고에 있는 군수 분야의 그 문제는 제가 위관장교 때부터 육해공군이 다 큰 문제였는데 계속 시정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7년(20-2)국정감사의 쟁점

《위원회별 2017년도 국정감사의 주요쟁점》

위원회	주요언론보도 키워드	비고
국회운영위원회	△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논란 △ 임종석 비서실장 등 전대협 출신 비서진 구성 △ 홍진호 사건 등 진실규명	
법제사법위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재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 △ SAT기출문제 저작권 재판의 난맥상 △ 박근혜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 △ 세월호 문서 조작 의혹 수사	헌재 소장소장 권한대행 관련 파행 미실시
정무위원회	△ 총리실 고위 간부의 과거 천안함 폭침 부정 사실여부 △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 △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 △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 △ 해운·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문제 △ 금감원의 채용비리와 전관예우, 임직원들의 차명주식거래 △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공정거래 문제 △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김영란 법의 난맥상 등	
기획재정위원회	△ 가계부채와 신보호주의에 대한 대책 △ 국세행정개혁TF △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 △ 소득주도성장 정책 △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현 정부 정책 난맥상 △ 법인세 등 증세논란 △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외교 비리 △ 공공기관의 인사비리 근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KBS와 MBC 파업사태와 방송의 공정성 문제 △ 통신비 인하 △ 탈원전 정책 공방 △ 포털 네이버의 뉴스 편집 조작 △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의 책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 국감보이콧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 △ 문화예술계(영화·출판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소속·산하기관장 공석 사태 △문체부 퇴직 고위공무원의 낙하산 재취업	

위원회	주요언론보도 키워드	비고
	△ 외국어고, 자사고 폐지정책과 혁신학교 학업성취도 문제 △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준비 상황	
외교통일위원회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정부의 대책 △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관련 팩트파악 및 조치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적절성 여부 및 시기문제 △ 홍진호 피랍 관련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평창동계올림픽 대책 △ 북핵 규탄 UN결의안 3건 중 2건 정부의 기권의사 관련	
국방위원회	△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발사 관련 대책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문제, 전술핵 재배치 △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 미군 헬기 도입 문제 △ 핵추진 잠수함과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도입 △ 국군심리전단의 대북확성기 사업 △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홍진호 사건 △ 군 사격장 병사 사망사고 △ 사회복지무요원의 적체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	사이버댓글이 더 부각됨
행정안전위원회	△ 전쟁 등 유사 시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 문제 △ 광주지방경찰청의 SNS글과 수뇌부 갈등 △ 고 백남기 사건관련 '청구인낙' 법원제출 방해문제 △ 소방공무원 증원·국가직화 문제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초동대처 문제 △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 시리즈 정책' △ 공무원 증원 논란 △ 청와대 기록 공개 논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북 쌀 지원과 한미FTA재협상 △ 살충제 계란 대책 △ 세월호 사고 기록 조작 여부 △ '살인개미' (외래 붉은 불개미)에 대한 조사·방역 대책 △ 마사회의 사회공헌 사업 저조 문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미FTA 재협상 △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기업 보호대책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 △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 정부의 탈원전 정책 △ 강원랜드 채용 청탁자 명단 자료 공방	
보건복지위원회	△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 마련 방안 △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 등 평가인증의 부실 문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사랑의 열매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부분에 집중 지원 △ 공공보건 의료 확대	

위원회	주요언론보도 키워드	비고
	△ 아동수당 △ 대한적십자사의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진료비 할인 등 방안 경영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 쟁점	
환경노동위원회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 △ 대기업들의 자회사를 통한 불법 파견 문제 △ 기업내 성희롱 피해자 상담을 하는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 물관리 일원화 △ 4대강 후속 조치 △ 미세먼지 대책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 예보관들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기상관측예보의 정확성 문제, 6차 북한 핵실험 당시 기상청의 미흡한 대응	
국토교통위원회	△ 8·2대책 후속 조치와 4차산업 대응책 △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보완책 △ 후분양제 제도 도입 필요성 △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문제 △ 드론성능인증기준 마련 필요성 △ 건설 현장 안전성 필요성 △ 공항 내진 설계 지진대책 미흡문제 △ 수리온 공정성 문제	서울시 국감에서 감사위원 협박관련
여성가족위원회	△ 위안부 관련 논의 △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 여성 혐오 문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관련된 대형 거대 쟁점은 북한핵·미사일 대책, 과거정부의 적폐청산, 현정부의 무능심판, 방송장악 논란, 방송의 공정성 문제, 탈원전 정책, 한미FTA 재협상 등이었고, 위원회별로는 공수처 등 검찰개혁,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대우조선해양사태, 소득주도 재정정책, 통신비 인하, 포털의 공정성문제, 정부의 대북정책 실효성, 가계부채 급증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세정책, 경기부양대책, 금융시장 안정, 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문제, 어린이집 안정성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서울시 청년수당제도, 사드배치, 정부의 원자력 정책, 쌀값안정화대책, 신재생 에너지사업, 파업문제, 생리대 등 화학 제품의 안전성, 주택시장 안정화, 청와대 주사파 논쟁 등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중간평가 이후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것은 자유한국당의 국감보이콧에 따른 방송의 장악 우려, 납북되었다 돌아온 흥진호사건 이외에는 10월 23일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중간평가 자료 참조

1. 피감기관 측근의 야당 감사위원 협박사건

피감기관의 장이 감사도중 화장실에서 감사위원을 협박한 사건이 있었는데, 올해 10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의 협박 발언 논란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가, 이 사업과 관련된 기업인이자 박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로부터 낙선운동을 하겠다 등의 항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성토했다. 해당기업에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진행하며 해당 경위를 파악하자고 맞서면서 끝내 국감이 일시 파행되었다.

2. 기획재정부 간부의 “또라이 발언” 논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질의 시작에 앞서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과장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료 요청에 기재부 측에서 전례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말미에는 ‘아씨, 박명재 보좌관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아이씨’라고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화가 끊어졌다 생각하고 말한 것이겠지만 기재부의 안이한 태도와 오만방자함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김 부총리의 사과와 함께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오늘 아침에 보고 받았다”며 “통화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그런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이 사과했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자유한국당보좌진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불성실한 국감 태도를 비판했다.

3.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게 질의입니까?”

전희경 의원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회의 강령을 보면 반미,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자, 피감기관인 임종석 비서실장은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 그것이 질의인가. 매우 유감이다”고 하였고, “5~6공화국 때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짓밟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보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 전 의원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했다.

의원과 피감기관의 논란 때문에 파행직전까지 갔으나 파행은 하지 않고 질의가 이어졌다.

전희경 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그게 질의입니까?
 전희경 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위원님, 그러면 그게 질의입니까?
 전희경 위원 무슨 말씀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매우 유감입니다.
 정용기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질의한 데 대해서?
 (장내 소란)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지요!
 정용기 위원 그게 질의냐니!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답변드리는 겁니다.
 김정재 위원 아니, 권력 잡았으면 다예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장내 소란)
 정용기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그게 질의냐니? 철저히 사과해요. 그게 질의냐니?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충분히 국회를 존중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답변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홍근 김선동 간사님, 잠깐만 앉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2017년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2017. 11. 6≫

4. 참고인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의 “제가 위원님 자식입니까?”

10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이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 달라”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올렸다”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고용 구조에 맞지 않고 노동생산성이 정체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다”며 “한쪽 얘기만 하지 말라”고 이 교수를 비판했다. 이 교수도 물러서지 않고 “한쪽 얘기가 아니라 경제 구조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이 교수 발언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교수는 “내가 내일모레 60인데 태도를 코치받을 나이나. 의원님 자식이나”고 따졌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도 “이 교수는 퇴장하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신창현 위원 제가 지금 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소의 웃음이 아닙니다.

지금 교수님의 그런 태도가 교수님의 진정성을 오히려 훼손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인 이병태 제가 내일모레면 육십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태도, 표정 이런 것 코치받을 나이입니까? 제가 위원님 자식입니까?

저는 분명히 최저임금의 문제점만 차례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반대한 적도 없고 최저임금을 생산성 향상이나 물가인상이나 또는 그것에 월등히 높은 것을 자영업자나 영세업자가 준비할 기간도 주지 않고 획일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저하고 의견이 다르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다른 거지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왜 모욕감을 느낍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저한테 동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모욕감 안 느낍니다. 그런데 교수가 하는 말에 귀를 찢고 의심을 했든지, 얼마나 소리를 치셨습니까?

신창현 위원 제가 이병태 참고인께 정식으로 여쭙보겠습니다.

이제 한 20분 후면 속기록이 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거니까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참고인 이병태 아니, 어떤 말에 대해서 이게 모욕적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신창현 위원 속기록 보고서 그것이 모욕적인 언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참고인 이병태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얘기해 봐야 서로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고……

신창현 위원 아니, 그것은 기록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팩트인데 확인하기 싫으세요?

참고인 이병태 어떤 언어에 대해서 모욕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말 자체는, 문자는 객관적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분이……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국정감사 (10월18일)》

5.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다음 질문하시죠?”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승

회 강원랜드 사장이 “다음 질문하시죠” 라고 하여 막말 논쟁이 벌어졌다.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은 10월 31일 종합감사에 불출석하였다.

정우택 의원 : 강원랜드 직원이 시사 프로그램 방송에서 인사 문제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유력 실세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들은 적 있냐. 그 민주당 인사가 누구냐
함승희 사장 : 방송을 보진 못하고 사후에 보고는 받았다. 목소리만 나와 누군지 모르고 있으며 민주당 인사가 누군지 모른다. 직원이 누군지 파악 중이다.
정우택 의원 : 방송 나가고 한 달째 파악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답변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똑 부러지게 해 달라. 설명하지 말고 아냐 모르나만 말해라. 그 다음 얘기를 해야 제가 다음 질의를 할 거 아니냐.
함승희 사장 : 다음 질문 하시죠
정우택 의원 : (고성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다음 질문하시죠. 국회의원한테 그따위로 질문을 하래. 지금 뭐 하는 거야 국감장에 와서 그 다음 질문하시죠? 그게 무슨 태도야
함승희 사장 : 지금 나한테 반말 합니까
정우택 의원 : 지금도 말대꾸하잖아. 이러니깐 강원랜드가 비리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3년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창피한 줄 알아라. 답변은 듣지 않겠다.

6.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가면 안 되는 데였나요?”**

2017년 10월 27일에는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인해서 사회를 맡은 신경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간에 설전이 중식 직후에 있었다. 고영주 이사장이 점심식사 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나가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신경민 위원장 대행에게 고영주 이사장은 ‘가면 안되는데 었나요?’라면서 가면 안되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이로 인해 잠시 파행을 빚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시작하기 전예요, 고영주 이사장이 점심 일정에 어디 가셨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답변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예, 하셔야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자유한국당 의총에 갔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뭘 하셨어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아니요, 무슨 요지로 대답을 하셨어요? 오늘은 국정감사 증언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기관 증인이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처신과 발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가면 안 되는 데였나요?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정당의 연사로 출연을 하셨어요.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거기 가면 안 되는 데인가요?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글썄, 오늘은……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쉬는 시간에 거기를 갔는데 그걸 가지고……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쉬는 시간에 아무 일이나 하나요? 고 이사장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 오셨어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지금 그 근거……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아니,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자유한국당에서 MBC 사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좀 와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오늘은 국감 증인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국감 증인으로서는……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오늘은 국감 증인이예요. 기관 증인이예요. 그냥 나온 증인도 아니고 방문진의…… MBC를 대표하는, 감시·감독하는 증인입니다. 지금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증인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증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하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증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주의하시라고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미리 주의를 주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그런 것을 미리 주의 줘서 안 가고, 가고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계속 검사 하셨고 공직에 계셨고, 지금 어디다 대고 항의하는 겁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나요, 증인한테?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아니,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뭐가 잘못됐냐고요? 뭘 잘했어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똑바로 하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뭐라고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지금 증인한테 그런 식의 말투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똑바로 하라고?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글썄요, 나보고 똑바로 하라니까 같이 똑바로 합시다.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경민 가만있어 봐.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년도 국정감사(10월 27일)》

■ 2017년(20-2)국정감사위원 홈페이지 활용도

**국정감사자료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 70.81%(20-1 29.1%)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86.36%에 이르러, 가장 낮은
법제사법위원회도 58.82%로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높아**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현황 중에 안내된 국회의원 홈페이지(블로그, 페이스북 등 포함)에 국정감사 자료(보도자료나 질의자료, 동영상, 사진 등 활동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 자료)가 있는 지를 확인해 본 결과, 국회의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298명중 211명으로 감사위원 중 70.81%에 달하는 감사위원이 국정감사 활동내역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조사 중 홈페이지가 있으나 연결이 안된 경우는 국정감사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위원회별로 보건복지위원회가 22명중 19명이 올려 놓아 86.36%로 게시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가 81.82%,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가 80.77%로 높았다. 가장 게시율이 저조한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였으나 이는 58.82%로 작년의 평균인 29.1%를 크게 웃돌았다.

작년과 달리 조사방식에 있어서 보도된 언론 기사를 포함하였으며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국감 자료를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페이스북 사이트를 기재한 국감 위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비교적 소수의 위원들이 언론 기사를 통하여 국정감사 자료를 게재한 점을 고려할 때, 수치의 변화는 괄목할만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의 경우 초선의원들의 대부분이 국회 홈페이지 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개인 sns를 소개하고 있지 않아서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초선 의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국회 홈페이지 내에 대부분 소개하였고 이러한 점이 올해의 개선된 수치변화를 이끈 하나의 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고 본다.

《20대 국회 2차년도 감사위원 홈페이지 국감자료 게시현황》

위원회	감사위원 수	국회를 통해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한 의원 수	홈페이지 소개의원 비율	홈페이지에 국정감사자료 게시한 의원 수	국감내.용 게시의원 비율
법 제 사 법	17	14	82.35%	10	58.82%
정 무	24	22	91.67%	17	70.83%
기 획 재 정	26	23	88.46%	21	80.77%
과학기술정보 방 송 통 신	24	18	75%	16	66.67%
교 육 문 화 체 육 관 광	29	20	68.96%	18	62.06%
외 교 통 일	22	21	95.45%	18	81.82%
국 방	17	13	76.47%	12	70.59%
행 정 안 전	21	16	76.19%	13	61.90%
농림축산식품 해 양 수 산	19	18	94.37%	14	73.68%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30	24	80%	21	70%
보 건 복 지	22	20	90.91%	19	86.36%
환 경 노 동	16	11	68.75%	10	62.5%
국 토 교 통	31	25	80.65%	22	70.97%
계	298	245	82.21%	211	70.81%

《20대 국회 1차년도 감사위원 홈페이지 국감자료 게시현황》

위원회	감사위원수	국회를 통해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한 의원수	홈페이지 소개의원비율	홈페이지에 국정감사자료게시 한 의원수	국감내용 게시의원 비율
법 제 사 법	17	11	64.7%	5	29.4%
정 무	24	18	75.0%	9	37.5%
기 획 재 정	26	16	61.5%	7	26.9%
미래창조과학 방 송 통 신	24	15	62.5%	5	20.8%
교 육 문 화 체 육 관 광	29	20	69.0%	9	31.0%
외 교 통 일	22	21	95.5%	3	13.6%
국 방	17	10	58.8%	4	23.5%
안 전 행 정	22	15	68.2%	8	36.4%
농림축산식품해양	19	15	78.9%	6	31.6%

위원회	감사위원수	국회를 통해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한 의원수	홈페이지 소개의원비율	홈페이지에 국정감사자료게시한 의원수	국감내용 게시의원 비율
수 산					
산업통상자원	30	19	63.3%	8	26.7%
보 건 복 지	22	16	72.7%	8	36.4%
환 경 노 동	16	9	56.3%	7	43.8%
국 토 교 통	31	17	54.8%	8	25.8%
계	299	202	67.6%	87	29.1%

〈참고 제19대 국회 2015년도 국회의원 홈페이지 국정감사 활동 내역 게시현황〉

위원회	감사위원 수	홈페이지 자료게시한 의원수	홈페이지게시율	위원회	감사위원 수	홈페이지 자료게시한 의원수	홈페이지게시율
법제사법	16	8	50.0%	안전행정	21	8	38.1%
정무	24	13	54.2%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	19	9	47.4%
기획재정	26	17	65.4%	산업통상 자원	30	18	60.0%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23	8	34.8%	보건복지	21	10	47.6%
교육문화체육 관광	30	15	50.0%	환경노동	16	11	68.8%
외교통일	23	4	17.4%	국토교통	31	19	61.3%
국방	17	8	47.1%	합계	297	148	49.8%

참고로 2017년 10월 31일 본 상임위 국감종료 시까지 2017년도 국정감사 중 국정감사NGO모니터단(www.goodlaw.org) 국정감사뉴스에 보도자료를 공개해 모 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경우는 89명이었고, 총 자료건수는 2,065건이었다.(이후에도 많은 의원들이 자료를 올려 놓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 공개한 의원 분석》

위원회/정당		의원 수	보도자료		총 자료
			협조 국회의원 수	협조율	
법제사법	더불어민주당	7	0	0%	0
	자유한국당	6	1	16.6%	1
	국민의당	2	1	50%	11

위원회/정당		의원 수	보도자료		총 자료
			협조 국회의원 수	협조율	
	바른정당	1	0	0%	0
	비교섭단체	1	0	0%	0
	계	17	2	11.7%	12
정무	더불어민주당	10	2	20%	28
	자유한국당	7	2	28.5%	9
	국민의당	3	0	0%	0
	바른정당	3	1	33.3%	16
	비교섭단체	1	0	0%	0
	계	24	5	20.8%	53
기획재정	더불어민주당	10	3	30%	56
	자유한국당	8	3	37.5%	21
	국민의당	4	1	25%	11
	바른정당	4	0	0%	0
	비교섭단체	-	-	-	-
	계	26	7	26.9%	88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더불어민주당	8	2	25%	30
	자유한국당	9	3	33.3%	45
	국민의당	4	2	50%	47
	바른정당	-	-	-	-
	비교섭단체	3	1	33.3%	27
	계	24	8	33.3%	149
교육문화 체육관광	더불어민주당	12	6	50%	149
	자유한국당	11	3	27.2%	47
	국민의당	4	0	0%	0
	바른정당	2	0	0%	0
	비교섭단체	-	-	-	-
	계	29	9	31%	196
외교통일	더불어민주당	10	1	10%	12
	자유한국당	8	1	12.5%	33
	국민의당	2	0	0%	0
	바른정당	2	0	0%	0
	비교섭단체	-	-	-	-
	계	22	2	9%	45
국방	더불어민주당	7	4	57.1%	90
	자유한국당	5	1	20%	2
	국민의당	2	1	50%	2
	바른정당	1	0	0%	0
	비교섭단체	2	0	0%	0

위원회/정당		의원 수	보도자료		총 자료
			협조 국회의원 수	협조율	
	계	17	6	35.2%	94
행정안전	더불어민주당	9	6	66.6%	161
	자유한국당	8	1	12.5%	8
	국민의당	2	0	0%	0
	바른정당	2	0	0%	0
	비교섭단체	-	-	-	-
	계	21	7	33.3%	169
농림축산 식품해양수 산	더불어민주당	7	5	71.4%	164
	자유한국당	9	2	22.2%	27
	국민의당	3	0	0%	0
	바른정당	-	-	-	-
	비교섭단체	-	-	-	-
	계	19	7	36.8%	191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더불어민주당	12	5	41.6%	153
	자유한국당	11	3	27.2%	24
	국민의당	5	2	0.4%	78
	바른정당	1	1	100%	9
	비교섭단체	1	0	0%	0
	계	30	11	36.6%	264
보건복지	더불어민주당	9	3	33.3%	37
	자유한국당	8	4	50%	130
	국민의당	3	2	66.6%	63
	바른정당	1	0	0%	0
	비교섭단체	1	0	0%	0
	계	22	9	40.9%	230
환경노동	더불어민주당	7	4	57.1%	89
	자유한국당	5	2	40%	24
	국민의당	2	0	0%	0
	바른정당	1	0	0%	0
	비교섭단체	1	0	0%	0
	계	16	6	37.5%	113
국토교통	더불어민주당	13	7	53.8%	400
	자유한국당	12	2	16.6%	59
	국민의당	4	0	0%	0
	바른정당	2	1	50%	2
	비교섭단체	-	-	-	-
	계	31	10	32.2%	461
총계		298	89	29.8%	2065

■ 2017년(20-2)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지자체 현안 국감보다 단체장 인사청문회 양상 여전 야당불참 국감장엔 단체장 칭찬(안희정 충남 도지사) / 질타(유정복 인천시장) 엇갈려 단체장의 정당 따라 다른 질의

제20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 경기도, 대구, 전북, 부산, 전남, 인천, 충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고, 강원도를 현장시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충청남도,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와 서울시를 감사여 3개위원회가 지방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3개 위원회가 11회 국정감사를 하였으며, 지난해 국감보이콧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6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으며, 지난 19대 국회 4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5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이 2개 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았으며, 서울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집행상 문제점을 밝혀내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며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함으로써 관련 내년도 예산이나 법률의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준비는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장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현안문제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여부가 관심사항이었다.

《2017년도 행정안전위 서울시 국정감사장》

○박성중 위원 그러시지요? 내년에 3선 출마하실 겁니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수원 팔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박원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경남지사 출마할 계획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없습니다.

○황영철 위원 한 군데 정도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고요 상당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나리오처럼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 3선 도전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면 3선 도전해서 서울시 다시 제대로 이끌어 가겠다, 이 정도의 연임 의지가 명백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직 명확한 답변이 없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시장 3선 도전의 의사가 명확한지 아닌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제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감이라든지 서울시정이 닥치고 있는 현안들이 너무나 엄중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정을 챙기는 일에 아직은 더 몰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위원 저는 지금이 독립법인화할 수 있는 제일 적기다. 왜냐하면 지금 KBS나 MBC, 방송법도 국회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울교통방송,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물론 박원순 시장이 **3선 하면 되시리라고** 저는 믿지만 이 시점이야말로……

방송 독립법인화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추진하십시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저는 이 위원님 요청대로 또 주장대로 교통방송은 재단법인이나 독립법인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도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장》

○김현아 위원 먼저 좀 뜬금없으시겠지만 **서울시장 3선에 내년에 도전하시나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위원님, 그런 질문 너무 받아 가지고요.

제가 사실 3선 하나, 안 하나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저는 서울시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의 뜻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견도 듣고 있고 또 저도 깊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시장님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다시 한 번 또 **서울시장 도전할 것으로 보고, 또 대권도 도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그렇게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진규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내년에 서울시장 3선에 나서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우물쭈물 또는 요리조리 피하시면서도 시민의 뜻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 시민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그만하시라는 뜻이 시민의 뜻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3선을 해서 더 시정을 돌보라는 뜻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시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셨어요. 시민의 뜻은 중요한데 아직도 시민의 뜻을 간파를 못 했다는 얘기에요?

지난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국감보이콧 여파로 취소되거나, 현장시찰로 대체되어 사실상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감 중반 자유한국당의 국감보이콧이 있었지만 국정감사는 진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진행현황》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위원회 (감사반장)	일자 (감사시간)	장소	주요이슈 및 논란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행정안전위원회 (반장 유재중)	10. 17.(화) 10:01~17:42	서울특별시청	▲소방직의 국가직화 ▲교통방송 편향성 문제
	국토교통위원회 (반장 조정식)	10. 25.(수) 10:07~22:47	서울특별시청	▲자료요구한 감사위원(정용기 의원)에 대한 의원실 협박사건 폭로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 빈곤문제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 문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추진 여부 ▲서울시 공무원들의 근로 여건 ▲노후 불량 하수관으로 인한 도로 함몰 문제 등
경기도 (지사 남경필)	행정안전위원회 (반장 유재중)	10. 19.(목) 10:03~15:55	경기도청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정책
대구광역시 (시장 권영진)	행정안전 지방1반 (반장 유재중)	10. 23.(월) 10:01~12:38	대구광역시청	▲통합신공항 건설, ▲하수슬러지고화처리시설 시공사 선정 ▲공무원 증원, 침체된 경제문제 ▲피감기관장 웃음 “답변 중 씩 웃는 행동 은 하지 말라”(박남춘 의원지적)
전라북도 (지사 송하진)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 (반장 진선미)	10. 23.(월) 10:00~12:35	전라북도청	▲새만금 속도전을 위한 SOC 건설 등의 전폭적 지원 약속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칭찬 국감이란 비판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 (반장 진선미)	10. 24.(화) 09:59~13:12	부산광역시청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논란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사태,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엘시티비리 관련 등
전라남도(행정 부지사 이재 영)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 (반장 진선미)	10. 24.(화) 10:00~12:35	전라남도청	▲호남 SOC 예산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국토교통위원회(반장 조정식)	10. 23.(월) 10:07~20:13	인천광역시청	▲'송도 6·8공구의 불공정 협약 논란 ▲혈값 매각, 독점사업권 특혜 의혹 ▲10년만의 국토위 국정감사 ▲시청 정문 앞에는 국정감사가 시작되 기 전부터 십정2구역 뉴스테이, 송림초 교 뉴스테이 지역 주민 400여명이 재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위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	10. 27.(금) 11:03~12:46	인천광역시청	▲ ‘오케이센터개발 시 재산 혈값 매 각’ 과 유 시장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 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불참한
충청남도	농림축산식품해	10. 23.(월)	충청남도청	▲핵심 농업정책인 ‘3농 혁신’ 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위원회 (감사반장)	일자 (감사시간)	장소	주요이슈 및 논란
(도지사 안희정)	양수산위원회 (반장 설훈)	10.11~17:47		▲ ‘안희정 충남지사가 관사를 호화스럽게 운영하고 한다’ 는 지적 ▲ ‘외부강연’ 에 대한 질책 ▲충남도가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 옹호에 앞장서는 지자체로 평가
	행정안전 지방2반(반장 진선미)	10. 27.(금) 10:10~12:12	충청남도청	▲안희정 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 여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이를 위한 개헌의 방향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입장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현장시찰]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행정안전위원회 (반장 유재중)	10. 30.(월)	2018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동계올림픽 현황 관련 보고 및 현장시찰
	국토교통위원회 (반장 조정식)	10.27.(금)	용평리조트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현장시찰 올림픽 준비상황 보고

《참고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현황》

지방자치 단체명	단체장	위원회 감사반	감사 일자	특징 및 내용 등
전라남도	도지사 이낙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9.30.금	반쪽국감(새누리당 의원 불참) 쌀값 하락과 저소득층에 대한 쌀의 국비지원, 친환경농업의 확대 필요성, 동물복지형 한우사육단지의 조성 필요성, 한우 수출 확대 방안의 검토,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타격을 입게 된 광양항 문제, 해양수산업복합벨트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재원 확보 방안, 천일염 생산여가를 위한 대책 마련
서울시	시장 박원순	안전행정위	10.04.화	시장 아들의 병역문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구의역 사고 7조원 채무 감축
		국토교통위	10.11.화	메르스 사태와 구의역 사고, 경주 지진 등 시민안전문제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	안전행정위원회	10.05.수	연정 문제, 모병제 발언문제
		국토교통위	10.10.월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의 지역 편중
제주자치도	도지사	국토교통위	10.7.금	태풍 ‘차바’ 로 인한 피해 복구 만전

지방자치 단체명	단체장	위원회 감사반	감사 일자	특징 및 내용 등
	원희룡			최근 인구 유입,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의 문제 중국에 편중된 관광객의 다변화, 외국인 범 죄 전담조직 인력 확충 필요성 제주 제2공항 관련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한 갈등해소대책

■ 2017년(20-2) 파행성 국정감사

지난해에는 집권여당의 전면 보이콧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에는 제1야당의 전면 보이콧에도 반쪽 국감이라도 진행되었고,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당일 현장시찰이 많아서 감사위원 출석률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다.

반쪽 국감까지 합쳐서 이번 국정감사모니터단에서 파악한 파행성 국감은 다음과 같이 28개 국정감사에서 반쪽 국감이나 일부 파행성 정회 등이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국정감사를 하지 못한 경우는 과방위 1개(KBS 등 국감, 추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와 법사위 1개(헌법재판소 국감)였다.

《모니터 보고로 구성해본 파행성 국정감사 일지》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파행원인	결과
10.12	외통위	외교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언어폭력'이라고 비난하자, 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항의해	심야진행
10.12	교문위	교육부	2015년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촌극을 연출	위원장 국정감사 중지선언 이후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아 자동산회
10.13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세월호 참사 사라진 7시 30분 놓고 여야 격돌. 정회	2시간정도 파행 후 정상진행
10.13	행안위	경찰청	한국당,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녹취록 제출요구, 개혁위 소속 위원들이 편향되었다고 주장, 의사결정을 지연	오후 2시 속개,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를 최대한 설득하고 이날 출석하지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파행원인	결과
			다봐야겠다고 강조. 이에 여당 반대로 50분간 정회	얕은 개혁위 관계자를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
10.13	교문위	문화체육관광부 외	12일 몸싸움 관련 장외 공방전으로 인해 1시간 30분 국정감사 지연	정회 후 재개
10.13	법사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인준을 못받은 김 대행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울)이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이라며 맞서면서 치열한 설전 끝에 결국 파행	오전10시부터 90분간 여야 양측의 공방 끝에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4당 간 사회의, 종합국감 이전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에 헌재 국감 일정 종료
10.16	정무위	금융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건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피켓으로 인해 국감이 잠시 파행	노트북 덮개 덮으며 재개
10.17	법사위	법률구조공단 외	이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초보고 7시간 행적조사’에 대한 반대입장 유지여부를 묻는 질문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 정회	30분간 정회 이후 11시 43분 속개
10.19	과방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외	오후 국정감사에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감사가 지연, 방문진 김원배 이사 사퇴 문제를 놓고 한국당 의원들이 감사 중지를 선언해 1시간 10분 가량 지연	오후 15시 33분 속개
10.23	농해수위	충청남도	자유한국당 측, 동성애 관련 질의, 설훈 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농해수 위다. 동성애는 우리 위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물론 국회 의원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충남도에 온 것은 (관련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 강조. 이후 편파적 국감진행이라면서 공방, 파행	오후 2시 30분 속개
10.25	국토위	서울시	야당위원의 협박성 녹취록 폭로 관련 여당과 공방, 파행	1시간만에 재개
10.26	법사위	대전고등법원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파행	10여분 파행 이후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파행원인	결과
				재개, 반쪽국감
10.26	기재위	부산지방국세청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반쪽국감	오후 1시 44분 정회
10.26	정무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오후 국정감사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10.26	농해수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오후 국정감사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10.26	행안위	한국정보화진흥원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5시간 가량 정회	오후 5시13분 재개 반쪽국감
10.26	산자위	중소기업진흥공단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오후 국정감사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10.26	과방위	한국방송공사 외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관련 자유한국당 오전 국감 불참, 이후 이사선임 관련 여야간 입장차로 자유한국당 정회요구, 파행	오후 3시 종료
10.27	복지위	한국장애인개발원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10.27	정무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10.27	행안위	충남도경 및 충남지방경찰청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10.27	법사위	대검찰청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10.27	과방위	방송문화진흥회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10.30	교문위	문체부 등 종합감사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공방, 파행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 재개
10.30	환노위	환경부, 기상청 등 대상 종합감사	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 문구로 인한 논란, 공방 후 파행	20여분 정회 후 속개
10.31	과방위	방송통신위 등	신경민 의원의 고영주 이사장 태도 지적 후 막말,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책임 묻다가 파행 야당의 지속된 ‘북한’ 관련 질의에 여당의 태클. 이후 말싸움으로 이어져 파행	30분정도씩 두 번 파행 후 정상속개
10.31	복지위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	자유한국당 피켓, 상복차림 철회요구 이후 공방, 파행	노트북 앞 문구, 상복차림 유지 합의, 국감속개
11.06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등	민정수석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인한 논란, 파행	12시 재개

정권교체 후 첫 국정감사는 준비 부족과 적폐 / 신적폐 논란으로 기대에 못미치는 국정감사

국회의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통하여 지난 1년 동안의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입법활동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국정현안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국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의 2017. 11.6. 여성가족위 국감 개의발언에서

20일 동안 계속될 국정감사가 정부에는 값진 성찰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람찬 의정활동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2017. 10. 12. 국정감사 인사말 중

1.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2017년 8월 31일 제353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¹⁾이 의결되었고 여야 교섭단체 4당의 합의에 의해 2017. 10. 12.부터 10. 31.까지 실시하고,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별도실시하기로 하여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6일과 7일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11월 6일 감사와 7일 현장시찰을하기로 하였다.
2. 2017년 8월 31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이 만장일치로 가결(재적 278명중 찬성 278명)되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종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되어 변경된 명칭으로 실시되었다.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감사위원회는 8선인 최다선 서청원 외교통위원회 위원 등 298명이었으나, 국무위원인 5명의 국회의원(도종환 문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수감 중인 배덕광 의원은 국정감사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상임위원회별로 국토교통위원회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16명으로 가장 적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7. 9. 28. 설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한정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보임하였다.

교섭단체별로 더불어민주당 121명으로 40.6%, 자유한국당 107명으로 35.9%였고, 국민의당 40명으로 13.42%, 바른정당 20명으로 6.71%였고 비교섭단체는 10명으로 3.36%였다.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현황》

2017년 10월 12일 기준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
더불어민주당	121	40.6%	자유한국당	107	35.9%
국민의당	40	13.4%	바른정당	20	6.7%
비교섭	10	3.3%	계	298	100%

4. 2017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2017년 9월 28일 제254회 정교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정무위원회 등 8개(정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교육문화체육관광, 국방, 행정안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총 44개 기관에 대해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전체 16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701개 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한 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122개였다. 가장 적은 위원회는 28개 기관을 선정한 기획재정, 외교통일, 국토교통 등 3개위원회였다(검임위 제외).

5. 국정감사의 병폐 중 하나가 과도하게 하루에 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다수 피감기관이 참석하는 종합감사를 제외하고도 전체 일정 중 무려 44회나 한번에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였다. 이렇게 5개 기관이상 동시에 국정감사를 받은 피감기관이 501개로 전체 피감기관 696개(정보위 제외함) 중 72%에 달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에는 하루에 36개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체일정 중 20개 이상 감사를 한 경우도 5일이나 되어 중요 피감기관이 아닌 개별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2017년 국정감사 중 동시수감기관이 5개 이상이었던 경우(종합감사 제외)》

위원회	전체 피감기관 수	일자	대표 피감기관명	함께 감사받은 기관수	감사시작 시간	감사종료 시간
국회운영(1)	8	2017-11-07	국회 소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5	10:03	17:56
법제사법(6)	72	2017-10-12	대법원	6	10:01	19:15
		2017-10-20	서울고등법원	14	10:00	18:46
		2017-10-23	서울고등검찰청	10	10:05	22:05
		2017-10-24	대구고등법원	8	10:05	12:41
		2017-10-24	대구고등검찰청	6	14:33	18:58
		2017-10-26	대전고등법원	10	10:03	12:48
정무(2)	44	2017-10-20	국민권익위원회	5	10:01	19:42
		2017-10-2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3	10:01	17:35
기획재정(1)	28	2017-10-24	한국수출입은행	5	10:07	19: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6)	80	2017-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10:02	22:52
		2017-10-13	방송통신위원회	3	10:10	22:49
		2017-10-16	원자력안전위원회	5	10:07	21:20
		2017-10-1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10:09	19:37
		2017-10-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6	10:06	20:08
		2017-10-20	한국연구재단	26	10:20	19:16
교육문화체육관광(10)	122	2017-10-12	교육부	7	10:22	22:30
		2017-10-13	문화체육관광부	16	11:30	24:40
		2017-10-16	문화재청	8	10:15	19:37

위원회	전체 피감기관 수	일자	대표 피감기관명	함께 감사받은 기관수	감사시작 시간	감사종료 시간
		2017-10-17	한국장학재단	12	10:12	19:58
		2017-10-19	대한체육회	36	10:16	22:57
		2017-10-23	충남대학교	10	10:08	13:10
		2017-10-23	경북대학교	5	10:09	12:18
		2017-10-24	전북대학교	5	10:05	12:38
		2017-10-24	부산대학교	7	10:03	12:21
외교통일(0)	28			0		
국방(5)	63	2017-10-12	국방부	30	10:03	19:58
		2017-10-16	합동참모본부	7	10:03	18:30
		2017-10-19	해군본부	7	10:00	12:40
		2017-10-19	육군본부	9	14:31	18:19
		2017-10-20	공군본부	5	10:01	12:26
행정안전(1)	32	2017-10-26	한국정보화진흥원	10	10:04	19: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2)	34	2017-10-24	해양경찰청	5	10:00	19:08
		2017-10-2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10:04	18:4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6)	59	2017-10-13	산업통상자원부	7	10:09	21:42
		2017-10-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	10:04	19:10
		2017-10-19	한국가스공사	12	10:15	21:55
		2017-10-23	한국전력공사	8	10:05	21:37
		2017-10-24	한국수력원자력	9	10:05	22:06
		2017-10-26	중소기업진흥공단	10	10:07	18:40
보건복지(2)	32	2017-10-17	식품의약품안전처	5	10:00	23:50
		2017-10-23	대한적십자사	5	10:01	19:17
환경노동(6)	60	2017-10-17	기상청	16	10:00	18:02
		2017-10-18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1	10:02	20:02
		2017-10-19	한강유역환경청	8	10:15	16:06
		2017-10-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6	10:03	20:24
		2017-10-2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4	10:00	18:18
		2017-10-26	근로복지공단	6	10:00	17:12
국토교통(2)	28	2017-10-16	한국감정원	7	10:05	21:42
		2017-10-20	한국철도공사	7	9:06	14:33
여성가족(1)	6	2017-11-06	여성가족부	6	10:02	19:20

위원회	전체 감기관 수	일자	대표 피감기관명	함께 감사받은 기관수	감사시작 시간	감사종료 시간
14개 위원회	696		44	501		

6.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은 10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10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 12회의 국정감사를 생중계 하였다. 국정감사 중 수요일은 국정감사가 없어 이전 것을 중계방송하였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역시 중계방송을 하였다.

국회본청에서 이루어진 77회의 국정감사는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의해 영상회의록으로 제공되었으며, 제18대 국회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외부 국정감사를 녹화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여 이번 2017년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부국감과 국회방송 생중계 국감을 영상회의록에 올려놓아 총 120개(검임위 2개위원회 3개 포함)의 영상회의록(2017. 12. 1.기준)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도 영상회의록 및 회의록 국회홈페이지 등재현황(2017. 12. 1 기준)》

위원회	영상회의록 개수	비율	회의록 개수	비율	총 회의 횟수 (지방국감 오전 오후구분횟수)	비고
국회운영위원회	2	100%	2	100%	2	
법제사법위원회	5	33.3%	6	40%	15	
정무위원회	9	81.8%	4	36.4%	11	
기획재정위원회	10	76.9%	8	61.5%	13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2	100%	7	58.3%	12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17	100%	6	35.2%	17	
외교통일위원회	4	100%	4	100%	4	국내반
국방위원회	5	55.6%	9	100%	9	
행정안전위원회	13	59.1%	6	27.3%	22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9	75%	7	58.3%	12	
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	10	100%	3	30%	10	

위원회	영상회의록 개수	비율	회의록 개수	비율	총 회의 횟수 (지방국감 오전 오후구분횟수)	비고
보건복지위원회	9	100%	5	55.6%	9	
환경노동위원회	8	80%	4	40%	10	
국토교통위원회	6	60%	6	60%	10	
여성가족위원회	1	100%	1	100%	1	
계	120	76.4%	78	49.7%	157	

7. 감사시간은 2016년도 1216시간 43분보다 91시간이 증가한 1307시간 35분이었는데, 지난해에는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쪽 국정감사이어서 질의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진행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8. 2017년도에도 국정감사 중 소품 및 시연이 많이 있었는데, 모니터위원들의 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국감 초반에는 많은 관심을 끌었으나 국감 후반부터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7년도 국정감사 중 감사위원이 사용한 소품 및 시연내역≫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의원	내용	비고
10.12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희경	EMP, 전자기파 충격기(자체 제작)	
10.12	외통위	외교부	윤영석	생존배낭	
10.12	행안위	행정안전부	이재정	김부겸 장관의 주민등록번호 맞추는 시연	
10.12	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최연혜	페 태양광 패널, 세척제	에너지 공단 지 협 조
10.12	국토위	국토교통부	정용기	난임주사기	
10.13	산자위	특허청	이찬열	짜통가방	
10.13	환노위	환경부	이정미	생리대	
10.13	환노위	환경부	신창현	생활화학제품	
10.13	복지위	보건복지부	박인숙	링거	
10.13	교문위	문화체육관광부	이동섭	황금프라이팬	
10.13	행안위	경찰청	진선미	국감장설치 몰래카메라 공개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의원	내용	비고
10.16	정무위	금융위원회	김한표의 자유한국 당 의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유인 물	
10.16	행안위	소방청	이용호	소방도끼, 랜턴	
10.16	행안위	소방청	진선미	소화기	
10.19	법사위	감사원	노회찬	신문지 깔고 드러눕기 퍼포먼스	
10.19	행안위	남부지방경찰청,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박성중	테이저건	
10.24	환노위	환경부	이용득	술부엉이, 수리부엉이 박제	

※ 10. 16.그리고 국정감사 보이콧 이후 국회의원 개인 PC 슬로건 부착이 파행의 원인이 되면서 이슈가 됨

9. 이번 국정감사의 특징은 사상 초유의 임기 중 탄핵으로 인하여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였으며, 결국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국정감사를 받게 되는 피감기관이 적지 않았고(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벤처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담아 여야 합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켰지만 초대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국정감사 진행), 결과적으로 여야당이 바뀌어 공수가 바뀌었지만 피감기관에 따라서는 여전히 여야당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한 시기에 정권의 인수과정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5개월동안 정부로서 국정의 새로운 틀이 아직 덜 잡혔진 상태에서 치루어진 감사였다.

《10월 19일 국정감사 중 직무대행 및 대리가 참석한 기관현황》

위원회	직무대행 및 대리 참석자	당일 전체 피감기관수	대행 및 대리 기관수
교문위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김종국 연화진흥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오정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성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직무대리 백기동 한국문화정보원경영관리부장 최선식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직무대리	36	6
정무위	김재중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3	1
과방위	한원용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인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원장 송재성 한국전기연구원 연구부원장 양근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	26	5

	정순용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산자위	안완기 한국가스공사 사장직무대리	13	5
	이판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김성수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		
	오재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직무대리		
	이재웅 한국석유공사 사장직무대리		
	계	78	17

10. 이번 국정감사에서 23시를 넘겨서 심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는 국회운영위원회 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를 비롯해 기획재정위 1회, 과방위 1회, 교문위 4회, 외교통일위 3회, 행정안전위 1회, 산업위 2회, 보건복지위 3회 등 16일이나 되었다.

《2017년도 심야 국정감사 현황(밤11시를 넘겨 진행한 경우)》

위원회 (횟수)	일자	피감기관	감사종료시간	비고
국회운영 (1)	2017-11-06	대통령비서실	23:24	조국수석 불출관련 정회
기획재정 (1)	2017-10-30	기획재정부	23:03	11시 2분 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 (1)	2017-10-30	과학기술정보통신 신부소관 등 전 체기관	25:19	
교육문화체육관광 (4)	2017-10-12	교육부	-	역사교과서 관련 파행후 자동 산회
	2017-10-13	문화체육관광부	24:40	전날 파행여진으로 지연시작
	2017-10-30	문화체육관광부 및문화재청 등	25:20	
	2017-10-31	교육부 등	24:00	
외교통일 (3)	2017-10-12	외교부	23:10	
	2017-10-30	외교부	23:56	
	2017-10-31	통일부	23:14	
행정안전 (1)	2017-10-13	경찰청	23:14	자료제출거부관련 파행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 (2)	2017-10-12	산업통상자원부	25:04	
	2017-10-31	산업통상자원부	23:45	
보건복지 (3)	2017-10-12	보건복지부	23:13	
	2017-10-17	식품의약품안전 처	23:50	생리대 등 안전성 문제
	2017-10-31	보건복지부	26:30	차수변경해계속
8개위원회	16회			

11. 국정감사 중 감사위원의 한마디 말씀이 회자되어 경각심을 주거나 이슈화되기도 하였는데 2017년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있었던 촌철살인(우수의원 위주로)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위원	말	배경/이유
10.12	국방위	국방부 등	김학용	야구팀이 10명인데 방망이, 글러브 4년 후에 주겠다는 것, 어떻게 필수 전력 확보할거냐	부대개편의 사업의 핵심장비 등 필수 전력화 사업 46개 중 40개가 예정보다 평균 4년가량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10.12	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정유섭	김연아 선수에게 피겨하지 말고 쇼트트랙을 하라던 얘기가 되느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외국에서도 한국 원전을 최고 기술로 인정하는 마당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10.12	외통위	외교부 등	박주선	미국과의 외교는 외화내빈,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는 설상가상. 일본과의 외교는 기대무산. 그리고 러시아와의 외교는 유명무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4강외교 성과를 폄평하며
10.13	국방위	방위사업청 등	이철희	장관의 직접 지시로 5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돼 합참이 소요 결정을 한다. 기록적 시간	지난 2014년 우리 군이 도입한 주한미군의 중고 시누크 헬기 14대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졸속 구매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10.16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등	김학용	참수부대가 참수시키려 갔다가 참수당할 우려가 많다	참수작전 핵심부대인 특전사 총 64개 팀 가운데 50여개 팀의 통신 상태가 먹통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10.16	정무위	금융위원회	이진복	(은행들이) 전당포식 영업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행이 직원 수와 점포 수 줄이기에 너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10.16	정무위	금융위원회	김성원	너무 한쪽만 제기되면 의혹이 사실처럼 된다	케이뱅크 인가 문제에 대해 여당의원들이 지적을 쏟아내자
10.16	정무위	금융위원회	김종석	이 사람이 개인 재산 7000만원을 날릴만큼 잘못했나? 이 사람 장가가려는 돈 다 날리게 생겼다	정부의 지난 '8·2 부동산 규제' 부작용 사례로써 투기지역 지정으로 위약금 7000만원을 물게 된 30대 시민의 사례를 들면서
10.16	법사위	법무부	노회찬	제가 검사라면 MB 무기징역 구형하겠다	법무부 국감에서 지금까지 언론보도 또는 국정원 적폐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 위원	말	배경/이유
					청산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10.16	법사위	법무부	박지원	지금까지 공수처안은 항상 호랑이안으로 나와가 지고 통과는 고양이안으로 되고 실행은 쥐꼬리로 된다	법무부 국감에서 공수처안이 아직도 검찰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10.17	행안위	서울특별시	장제원	정신이 나갔다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통해 “아이 들의 정신세계를 강탈”했 다고 비판하면서
10.17	정무위	금융감독원	김종석	금감원의 영문명이 F S S (F i n a n c i a l Supervisory Service), 금 융감독’서비스’다. 규제 청이 아니라	감독행정의 목적은 피감독 자의 규정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지 피감독자를 잡아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면서
10.17	정무위	금융감독원	김해영	지금 거기 앓아계시는 부원장 이하 분들은 전 부 다 직무유기에 해당 하는 것 같다	계속되는 취업비리 사건에 도 불구하고 내부 인사규 정 개정에 나서지 않은 금 감원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 하면서
10.17	정무위	금융감독원	정재호	지금 우리나라는 신용등 급에 의한 신분사회다	사회에 갓 진출한 사회초년 생들에게 미리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10.18	환노위	중앙노동위원회 등	한정애	(피해자가) 오늘은 점심 뭘 드실래요 라고 물으 면 (가해자가) 너 라고 얘기했다	성희롱 사건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 도저히 읽고 있을 수가 없는 지경이라며 성희롱 사건 질타
10.19	행안위	경기도	백재현	경기도 국감인데 이재명 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	하루 종일 질의에서 남 지 사의 청년정책과 이 시장의 청년 배당정책이 비교 거론 되고,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 원은 아예 이 시장이 구단 주로 있는 성남FC와 은행장 으로 있는 주빌리 은행 관 련 질의를 하자
10.20	농해수 위	농협	이만희	무엇이 농민을 위해 필 요한지 알아야 할 것 아 니냐	농민들의 농기계로 인한 사 망 및 사고에 따른 보상체 계와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 위원	말	배경/이유
10.23	국방위	육군 제2작전사령부	김학용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재활용센터도 아니고...	육군 2작전사의 장비가 전방1·3군에서 수명이 다한 물자를 전환배치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10.23	국방위	육군 제2작전사령부	김중로	공관과 관사가 크고 궁궐같이 지어진 것은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	박한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게 대지 8200평·건평 160평에 달하는 대규모 공관의 효율적 이용을 촉구하며
10.24	법사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고등검찰청 등	박지원	반려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할 순 없는 노릇 아닙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하지만 주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하며
10.24	법사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고등검찰청 등	정성호	기업이 100마일로 움직이면 법은 1마일로 움직인다	황철규 대구고검장에게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며
10.24	법사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고등검찰청 등	박지원	오동요이 떨어졌으면 가을이 온 것을 알 듯 우병우가 떨어지면 노승권 지검장도 떨어져야 한다	노승권 대구지검장의 우병우 사단 의혹에 대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강하게 지적
10.24	법사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고등검찰청 등	정성호	법원이 제일 못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한 영장 기각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며
10.24	법사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고등검찰청 등	노회찬	국정감사는 묻고 따지고 호통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감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다	소년 사건을 8년간 전담해온 '소년범의 아버지'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판사에게 감사하다며
10.26	농해수위	수협	이양수	어업인을 위한 은행이냐, 일반인·기업인을 위한 은행이냐	수협은행장에게 어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라고 주문하며
10.30	환노위	환경부, 기상청	강병원	전어 냄새를 맡으신 것도 아닐 텐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복귀해주셨다	국감 보이콧 철회를 선언한 뒤 국감장으로 복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10.31	국방위	국방부 등 중합감사	김중로	국민이 불안해 하니 문정인 특보와 술 한잔 하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보간에 자꾸 엇박자가 나는 점을 지적하며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스는 누구집니까?’가 회자되어 유행어가 됨

2017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용 일수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	평균 감사위원 출석률
법제사법 (권성동)	17	72	12	92:11	2	5	95.0%
정무 (이진복)	24	44	12	102:48	8	9	92.4%
기획재정 (조정태)	26	28	11	97:13	6	10	91.3%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신상진)	24	80	12	97:49	9	12	87.5%
교육문화 체육관광 (유성엽)	29	122	11	116:18	6	17	95.6%
외교통일 (심재권)	22	28	15	91:10	4	4	97.7%
국방 (김영우)	17	63	13	50:51	2	5	93.4%
행정안전 (유재중)	21	32	12	105:14	3	13	90.5%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설훈)	19	34	12	114:42	8	9	87.7%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장병완)	30	59	12	113:52	10	10	98.0%
보건복지 (양승조)	22	32	12	103:49	8	9	92.4%
환경노동 (홍영표)	16	60	11	92:34	5	8	90.0%
국토교통 (조정식)	31	28	11	98:34	3	6	96.8%
국회운영 (정우택)	28	8	2	21:12	2	2	98.2%
여성가족 (남인순)	17	6	2	9:18	1	1	100.0%
계	343	696	160	1307시간 35분	77	120	93.77%

《참고》

1. 국감당시 국회의원 현원은 299명중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을 제외한 298명이 감사활동을 하였음.
2. 감사시간은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며, 일부위원회에서 국회공보와 모니터위원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
3. 외교통일위의 감사대상기관과 시간은 해외국정감사까지 포함된 것임.
4. 감사일수와 피감기관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였고, 과방위와 교문위는 각 1일 추가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종합감사를 이틀에 걸쳐 하였음.
4.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은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화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내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된 국정감사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녹화하여 올려 놓은 국정감사의 총합을 표시함. (2017년 12월 1일 기준임)

※ 이상의 모든 수치는 국회법상 비공개인 국회정보위원회는 제외된 것임.

《참고 2016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2015)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 용일수 (2015)	화상모니터 링가능 영상회의록 (2015)	의원 출석률 전체/정상화이후만 (2015)
법제사법 (권성동)	17	72(72)	12(12)	101:49 (119:04)	2(2)	5(6)	90.2%/96.8% (100%)
정 무 (이진복)	24	44(44)	11(13)	104:28 (102:29)	9(6)	9(8)	99.6% (94.6%)
기획재정 (조경태)	26	28(28)	12(12)	88:45 (119:24)	8(6)	9(8)	99.6% (92.9%)
미래창조 과학방송 통신 (신상진)	24	78(77)	12(11)	80:30 (97:14)	8(8)	10(11)	94.2%/97.7% (86.5%)
교육문화 체육관광 (유성엽)	29	116(118)	12(12)	153:30 (143:21)	11(8)	11(10)	78.7%/97.0% (97.5%)
외교통일 (심재권)	22	41(30)	14(15)	43:56 (67:57)	4(3)	4(3)	76.1%/100% (85.87%)
국 방 (김영우)	17	53(52)	13(12)	50:53 (68:54)	5(4)	5(6)	83.7%/90.8% (94.8%)
안전행정 (유재중)	22	31(34)	12(12)	72:42 (106:59)	5(5)	6(13)	100.0% (95.2%)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김영춘)	19	35(42)	14(13)	101:47 (116:56)	5(5)	6(11)	83.3%/99.3% (98.1%)
산업통상 자원 (장병완)	30	56(55)	12(12)	103:21 (105:22)	8(7)	8(8)	86.7%/100% (94.0%)
보건복지 (양승조)	22	32(32)	12(11)	112:27 (107:28)	6(7)	8(9)	84.1%/97.7% (93.3%)
환경노동 (홍영표)	16	58(59)	11(12)	97:51 (96:05)	5(7)	7(9)	86.1%/100% (87.5%)
국토교통 (조정식)	31	29(36)	11(11)	104:44 (101:28)	4(2)	5(5)	83.0%/99.1% (95.3%)
계	299 (297)명	687 (694)개	158 (158)일	1216시간43분 (1352:41)	80 (73)일	97(107)개	88.10%/98.28% (93.7%)

- 〈참고〉 1. 국감당시 국회의원 현원은 300명중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감사활동을 하였음.
 2. 감사시간은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며, 일부위원회에서 국회공보와 모니터위원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 국회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포함하면 감사시간은 37시간 36분(지난해 20시간 35분)이 더 증가함.
 3. 외교통일위의 감사대상기관은 해외국정감사까지 포함된 것임(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함)
 4.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은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화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내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된 국정감사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녹화하여 올려 놓은 국정감사의 총합을 표시함. (2016년 10월 25일 기준임, 참고로 지난해는 2015년 11월 8일 기준임)

〈 겸임 상임위원회 통계 〉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감사대상 기관수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지난해)	국회사용 일수	화상모니터 링가능영상 회의록	감사위원 출석률 (지난해)
국회운영 (정진석)	28	8(8)	2	21:42 (20:02)	2	3(3)	100% (96.4%)
여성가족 (남인순)	16	6(6)	1	15:54 (11:35)	1	1(1)	100% (100%)

《 국정을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감사장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책무다. 》

감사위원들께서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참석하고 자리를 지켜야(坐定) 할 5가지 필요성

1. 수감기관(대개 20~40명)을 압도하는 숙연한 감사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감사위원(국회의원) 전원이 감사위원석에 좌정(坐定)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정감사가 수감기관에 대해서 기관단위로, 즉 국회(상임위 감사반)가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석이 텅빈 채 질의하는 감사위원 한 사람만 남아서 감사하는 것이 옳은지? 효율적인지? 그렇다면 전체 감사위원석(15~31석)을 상설하기보다는 한사람씩 올라가서 질의하는 감사위원 좌석을 (감사장 전면)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등의 “심상치 않은 여러 상황(소위 변론의 전 취지)등”을 파악·대처하기 위해서도 ‘자리지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사 감사장 밖 의원실 등에서 TV 화면으로 타 의원의 질의내용을 시청한다고 하더라도, TV 카메라만으로는 감사장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나 민감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그나마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충실한 감사의 결실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3. 피감기관의 교묘한 회피성 답변에 대한 승복을 받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교묘한 회피성 답변으로 “질의와 감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피감기관”이 적지 아니한데, 그런 상황을 지켜 보면서 수감기관의 승복을 받아 내려면 회피성 답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타 의원과 수감기관의 질의응답을 꼼꼼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중복·반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많은 상임위에서 중복·반복질의로써 연중 20일에 불과한 국정감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바, 수감기관에게 ‘실상을 모르는 허술한 감사’로 알보이지 않고, “다른 의원이 방금 전에 했던 질의를 똑같이 다시 질의하는” 중복질의만이라도 피하자면 감사위원의 ‘자리지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국감직후에 있는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감사위원으로서의 ‘질의준비’ 또는 ‘국감 외의 다른 업무처리’를 ‘이석’의 사유라 할 수 없으며, 감사당일에는 타의원의 질의내용이나 피감기관의 답변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감직후에 있을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에 긴요한 자료를 수집·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장을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본 NGO모니터단의 출석·이석체크는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틀이상 결석시에는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던 것이며, 둘째, 이석 상황은 정성평가 결과가 동일하거나 비등한 우수의원 후보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가·감정평가를 하여 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